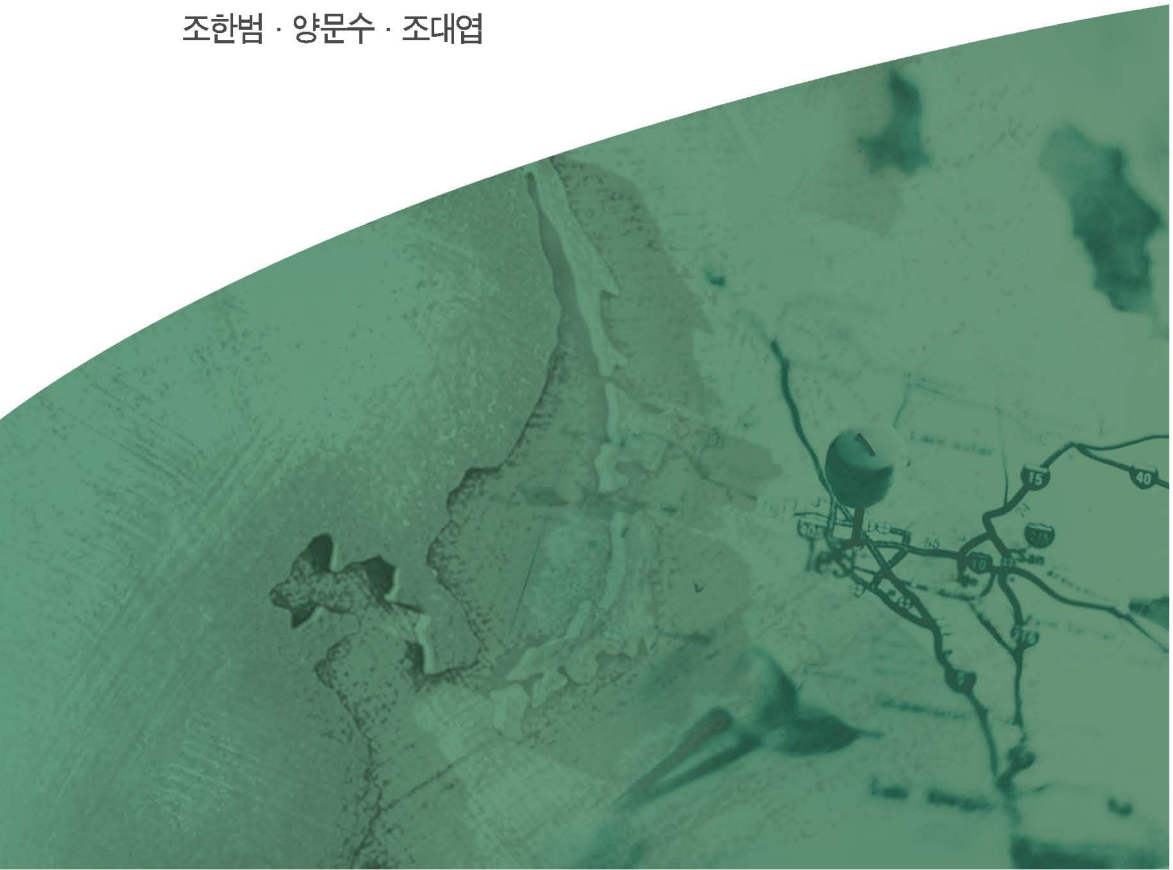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 양문수 · 조대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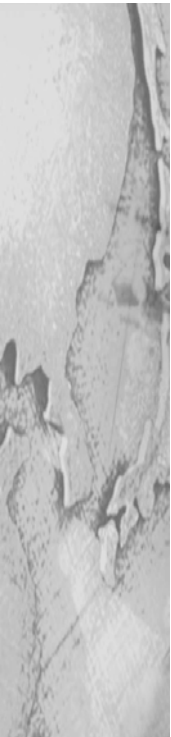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 양문수 · 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원기획 (02-745-8080)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ISBN 978-89-8479-581-5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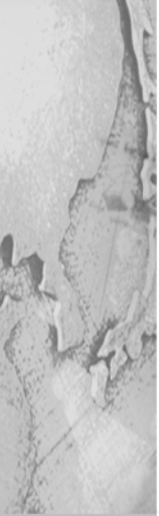
가 격 ₩7,5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사회갈등의 이론적 검토	7
1. 사회갈등의 개념	9
2.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과 신자유주의 갈등사회	23
3.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과 사회주의 갈등사회	36
4.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의 전망	48
III. 북한의 사회갈등구조	53
1. 사회주의 사회갈등의 배경	55
2.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66
3. 북한의 사회갈등구조	70
IV. 북한의 경제위기와 사회갈등 실태	83
1. 경제위기와 불평등 수탈 구조의 형성	85
2. 부익부 빈익빈 현상	97
3. 사회갈등의 인식과 표출	109

V. 북한 사회갈등 전망	123
VI. 결론	133
참고문헌	1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7

표 목 차

<표 II-1> 사회불평등과 계층에 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인식	16
<표 IV-1> 경제위기 이후 특수·일반경제의 비중 변화	91
<표 IV-2>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 시장과 연계된 조세의 제 유형	92
<표 IV-3> 세외부담의 지속적 증가 여부	95
<표 IV-4> 세외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95
<표 IV-5> 2007년 이후 본인의 현금 소득 변화	100
<표 IV-6> 2007년 이후 개인의 현금 소득 감소 이유	100
<표 IV-7> 2007년 이후 정경유착형 빈부격차 확대 현상	107

I. 서론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갈등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또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한다. 적대감, 전쟁, 경쟁, 긴장, 모순, 투쟁, 불합의, 불일치, 논쟁, 폭력, 반대, 혁명 등은 모두 갈등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은 계급과 조직 등 집단적인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의 양상을 지닐 수도 있다. 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역시 명시적인 사회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갈등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는데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공통된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갈등은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과 불평등한 분배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갈등은 수반되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출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사회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위기사회갈등의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갈등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적 가치와 이를 지향하는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주의의 경우는 비물질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이윤추구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주의는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하는 한편 개별적 이윤추구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니는

I
II
III
IV
V
VI

구조적 특성의 차이와 아울러 지향되는 가치의 특성들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부터 비롯된다.

사회주의 중진국 수준의 공업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체제 사회갈등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장기간의 구조적 경제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주의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부문, 사회주의요소와 시장요소의 혼재, 그리고 생존경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말기에 나타났던 와해기적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갈등 역시 이와 같은 배경적 조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95년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요청 이후 북한체제는 만성적인 위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만성적 위기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새로운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새로운 구조의 지연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이해관계의 상충은 사회갈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화의 지향성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관련된 상당한 ‘해체비용’의 지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요소의 부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경제위기의 지속과 시장구조의 형성과정은 새로운 사회갈등구조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경제위기 속 일련의 변화과정은 북한의 동질화되어 있던 사회주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신흥 유산계급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제

의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영 상인계층의 등장은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아울러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다는 점에서 위협성이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갈등을 기초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위기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불평등구조는 기존 사회주의 계급·계층구조의 전면적 와해와 아울러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경제위기는 전 사회적인 궁핍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계급·계층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불평등을 둘러싼 갈등구조의 심화와 아울러 급격한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갈등의 이해는 현 북한체제의 진단 및 향후 북한변화의 가늠자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위기구조와 사회갈등구조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사회갈등의 개념을 밝히고,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과 신자유주의 갈등사회 및 사회주의 갈등사회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북한의 사회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및 불평등체제,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의 인성을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주의 사회갈등의 배경으로 다루었다. 또한 사회주의 갈등의 주요 환경적 요건으로 체제전환 과정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사회갈등에 대한 구조분석이 시도되었다. IV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에 대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경제위기 이후 형성된 불평등수탈 및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사회갈등을 인식과 표출방식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이를 토대로 V장에서 북한 사회갈등에 대한 전망이 시도되었다.

I
II
III
IV
V
VI

II. 사회갈등의 이론적 검토

1. 사회갈등의 개념

가. 사회갈등의 일반이론

사회과학의 연구주제 가운데 특히 사회학분야의 연구관심으로 ‘사회갈등’ 만큼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도 드물다. 일반적으로 사회학분야에서는 사회갈등을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학의 주요 거대이론들은 대체로 현대사회의 질서란 어떻게 가능한 가라는 이른바 홉즈적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을 크게 보면 사회를 보는 균형론 혹은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 혹은 계급론적 시각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회질서는 가치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며, 후자의 경우는 지배계급이나 지배권력의 강제에 의해 질서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제에 의한 질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갈등은 그 자체가 강제의 내재적 요소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가치의 합의에 의한 질서 또한 합의의 과정적 측면을 보면 갈등의 과정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없애야 할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제도적 수준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의 일반이론들은 대부분 이처럼 사회갈등을 편재적 현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갈등 자체를 하나의 질서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갈등이론은 다양한 사회단위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기본 법칙을 밝히는데 주력함으로써 추상수준이 높은 일반이론을 지향하고 있다.¹

I

II

III

IV

V

VI

갈등은 인간의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갈등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정의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경우처럼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도하는 행위자의 의도적 행위”²라는 매우 포괄적인 차원의 행위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베버의 정의에 따르면 갈등은 폭력적일 수도 있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 ‘평화적 갈등’에 해당한다. 타인들도 공히 원하는 기회나 특권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한 공식적이고도 평화적인 시도인 한에서 평화적 갈등은 ‘경쟁(compet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또는 사회집단 간 생존과 특권을 얻기 위한 투쟁들이 갈등차원에서 의미 있는 명시적인 상호지향성이 없을 경우 ‘선택(selec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³ 이 같은 점에서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회관계에 있어 갈등은 필연적인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은 인간의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곳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부정적인 기능을 넘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갈등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다렌도르프(Ralf

¹ 일반 갈등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 코저(Lewis Coser), 콜린스(Randal Collins), 터너(Jonathan H. Turner) 등이 대표적이며 다음과 같은 저술을 참고할 수 있다. R. Collins, *Conflict Sociology: Toward an Explanatory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L.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London: Free Press of Clencoe, 1956); R.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R. Dahrendorf,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 No. 2 (June 1958), pp. 170~183.

² “어떤 행위가 타 집단의 저항에 대항하여 의도적인 의지의 관철을 시도하고 있는 한 이 사회관계는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 Max Weber,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ch,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 38.

³ *Ibid.*, pp. 38~39.

Dahrendorf)와 코저(Lewis Coser)도 갈등의 일반성과 광의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렌도르프는 “사회적 힘들 사이의 드러난 충돌뿐만 아니라 경연, 경쟁, 논의, 긴장” 등에도 갈등의 개념을 사용했다. 다렌도르프는 어떤 사회에서나 제도화는 ‘권위적으로 조정된 단체(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s: ICAs)’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ICA 내에는 오직 기본적인 두 가지 역할유형으로 지배하는 역할과 지배받는 역할이 있게 된다. 이러한 역할유형은 권위의 분배를 의미하며 ICA 내에서는 이 같은 권위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ICA 내에서 일종의 권위의 재분배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갈등의 순환과정은 지배와 종속관계의 이익이 잠재적인 수준에 있는 이른바 ‘의사집단(quasi group)’이 집단이익이 현재화된 ‘갈등집단’ 혹은 ‘이익집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코저 역시 갈등의 일반성을 증명하고 체제의 통합을 위한 기능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적대감, 전쟁, 경쟁, 긴장, 모순, 투쟁, 불합의, 불일치, 논쟁, 폭력, 반대, 혁명 등은 모두 갈등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⁴ 코저의 갈등이론은 기능주의가 강조됨으로써 다렌도르프의 이론과는 차이를 갖지만 갈등관련 변수를 추상화시켜 일반 갈등이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게 주목되는 이론이다. 코저는 사회체계에 대한 갈등의 통합적 기능과 적응적 기능을 강조한다. 코저의 이론은 첫째로 체계부분들은 통합상의 불균형을 갖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둘째,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체계의 재통합을 초래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은 체계구조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통해 미래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⁴ 조나단 H. 터너,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2), pp. 218~219.

I
II
III
IV
V
VI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할 역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기능적 갈등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각에서 갈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첫째, 불평등한 체계에 속한 피지배층이 현존하는 희소자원의 분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때, 특히 불만을 시정하기 위한 통로가 거의 없을 경우나 보다 특권화 된 지위로의 사회이동률이 낮을 경우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의가 증가할 때 피지배층은 지배층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피지배층의 사회화 경험이 내적으로 자아구속력을 넘어서는 범위와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외적 강제를 적용하는데 실패할 경우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코저의 갈등이론은 이 같은 갈등의 원인과 함께 갈등의 강렬성과 폭력성, 갈등의 지속성 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렌도르프의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전통에 위치하고 코저의 갈등론은 게오르그 짐멜이나 막스 베버의 전통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이론적 전통에 있든 이 같은 갈등이론은 공통적으로 사회갈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역사적인 조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추상수준이 높은 일반이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갈등을 보편적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터너는 사회갈등의 이론이 전제하는 갈등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⁵ 첫째, 사회관계는 체계성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갈등적 이익들로 가득 차 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은 사회체계가 갈등을 체계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따라서 갈등은 사회체계에 만연해 있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넷째, 이러한 갈등은 이익의 양극적 대립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갈등

⁵ 위의 책, p. 159.

은 희소자원, 특히 권력의 분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섯째, 갈등은 사회체계에서 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갈등은 계급과 조직 등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싸움이 개인 간의 갈등이라면, 혁명은 사회계급들 간 갈등형태의 하나가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짐멜(G. Simmel)이 언급한 ‘사회성(sociation)’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역시 명시적인 사회갈등의 성격(conflict as sociation)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은 가장 명시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개인 홀로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⁶

이와 같은 갈등은 부정적 기능과 아울러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갈등의 기능에 대한 초기적 연구는 짐멜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은 코저라고 할 수 있다. 코저의 갈등이론은 사회전체에 대한 갈등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 체계 내의 사회적 단위들이 분화되고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일수록 갈등의 빈도는 더욱 높아지지만 갈등의 강렬성과 폭력성은 낮아지기 쉽다고 강조한다. 또한 갈등의 강렬성과 폭력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갈등은 체계단위들의 혁신과 창조성의 수준을 증가시키며, 체계단위들이 양극화하기 이전에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갈등관계에 대한 규범적 조정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적 쟁점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며 사회단위들 간에 연합적 제휴의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이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킬수록 체계 전체의 내부적인 사회통합 수준은 높아지고, 외부

⁶ L. A. Coser and B. Rosenberg(eds.), *Sociological Theory: a book of readings* (New York: Macmillan, 1976), p. 175.

I
II
III
IV
V
VI

적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 역시 증대하게 된다.⁷

코저는 특히 집단의 결속과 관련된 갈등의 기능에 주목, 갈등이 느슨하게 구조화된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코저는 갈등을 외부갈등(external conflict)과 내부갈등(internal conflict)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집단적 정체성의 확인과 유지에 기여하는 점을 주시했다. 그러나 코저는 갈등이 집단의 통합에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외부갈등은 내적통합에 매우 중요하지만 내부통합이 매우 약화되어 있을 경우 내부갈등이 심화되거나 심지어 해체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코저는 외부갈등이 내적 통합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으로 제2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고 있다. 외부갈등이 영국의 경우 내적통합을 강화시켰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갈등이 기본적 가치나 근본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을 경우 통합의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⁸

코저의 관점을 적용할 경우 몇 가지 복합적인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내적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외적 갈등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소련과의 냉전적 관계의 가속화는 미국의 내적 통합력을 다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사회의 통합력의 상당 부분도 아랍세계와의 장기적인 갈등관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의 갈등은 고립되어 있는 개인들의 활동적인 역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⁷ 조나단 H. 터너, 정태환 외 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나남, 2001), pp. 227~233.

⁸ R. A. Wallace and A. Wolf,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0), pp. 135~138.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미국의 청년세대에게 정치생활에 있어서의 활발한 역할과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⁹

이 같은 점에서 사회갈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제는 사회변동이다. 즉 사회갈등은 사회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며, 사회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다양한 사회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갈등과 사회변동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다렌도르프가 있다. 갈등과 관련한 다렌도르프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의 하나는 갈등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며, 일단 등장한 갈등집단은 사회구조 내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사회갈등과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다렌도르프의 논의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해관계(interests)와 집단의 성격과의 관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렌도르프는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잠재적 이해(latent interests), 현재적 이해(manifest interests), 유사집단(quasi groups), 이익집단(interest groups) 및 갈등집단(conflict groups) 등은 사회갈등을 설명하는 기본개념들이며, 이는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¹⁰ 즉, 일정 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자각하지 못하는 이해관계들은 특정한 계기들을 통해 구성원들의 개개인이 이를 인지하는 상태로 발전하며, 이는 집단형성의 차원에서 유사집단에서 이익집단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명시적인 갈등집단으로 변화하는 전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권

⁹ 조지 리처, 최재현 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pp. 190~191.

¹⁰ 위의 책, pp. 181~189; Wallace and Wolf,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pp. 121~132.

력(power), 권위(authority),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interests)들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갈등의 다양한 기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갈등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해관계의 불평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사회집단인 계급 및 계층에 대한 이해는 사회갈등의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갈등과 관련한 상반된 패러다임으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 표 II-1 사회불평등과 계층에 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인식

	기능론 관점	갈등론 관점
1	계층은 일반적이며,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계층이 일반적이지만, 필연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2	사회조직이 계층을 형성한다.	계층이 사회조직을 형성한다.
3	계층은 통합과 조화, 결속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계층은 집단 간 경쟁과 갈등으로부터 비롯된다.
4	계층은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기능을 윤택하게 만든다.	계층은 사회와 개인의 긍정적 기능을 자극한다.
5	계층은 공유된 사회적 가치의 표현이다.	계층은 권력집단의 가치표현이다.
6	권력은 대체로 사회 내에서 정당하게 분배되어 있다.	권력은 대체로 사회 내에서 부당하게 분배되어 있다.
7	직무와 보상은 공평하게 할당되어 있다.	직무와 보상은 공평하게 할당되어 있지 않다.
8	경제적인 차원은 다른 사회적 차원들에 있어 부차적이다.	경제적인 차원은 사회 내에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9	계층체제는 진화적인 과정을 거쳐 변화한다.	계층체제는 종종 혁명적인 과정을 거쳐 변화한다.

출처: Beth E. Vanfossaen, *The Structure of Social Inequality* (Boston: Little, Brown, 1979), p. 59.

계급과 계층개념은 개인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갈등주체와 단위의 성격에 관한 문제의식을 야기한다. 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주체와 단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다렌도르프는 조직의 상이한 다섯 수준, 즉 역할, 집단, 부문, 사회 및 초사회적 단위를 상정하고 이 단위 내부 갈등과 단위 간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집단, 계급, 국가, 공동체 간 갈등은 성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갈등단위의 성격이 갈등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갈등의 단위와 주체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모호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호함은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는 모든 사회단위에 갈등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 및 다양한 갈등주체와 단위 간 갈등양상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단위 간의 갈등은 명백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¹¹

이 같은 논의들을 기초로 몇 가지 차원에서 사회갈등의 공통된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갈등은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과 불평등한 분배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갈등은 수반되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출될 수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에 대한 공통의 합의보다는 광의에서 갈등의 범주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광의에서 갈등을 정의하는 핑크(Clinton

¹¹ 조나단 H. 터너,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pp. 220~222.

I
II
III
IV
V
VI

Fink)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핑크에 의하면 갈등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실체가 적어도 적대적인 심리적 관계의 한 형태에 의해서, 혹은 적어도 적대적인 상호작용의 한 형태에 의해서 연결된 어떤 사회적 상황 또는 과정”이며, ‘적대’의 개념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목적들’, ‘상호 배타적인 이익들’, ‘감정적 적대’, ‘불합의’, ‘폭력적 투쟁’, ‘규제된 상호간섭’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¹²

나. 사회갈등의 역사성

사회갈등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제시되는 갈등의 개념은 보편적이며 또 모호하기도 하다. 갈등의 개념과 분석단위가 모호한 이 같은 일반갈등이론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특수한 갈등현상에 주목함으로써 갈등의 범위와 분석단위를 구체화하는 연구의 경향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국제적, 인종적, 계급적, 성별, 종교, 윤리, 공동체적, 직업적 갈등 등 개별사회의 구체적인 갈등사례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경향을 들 수 있으나 보다 주목할 만한 특수한 갈등모델로는 역사비교사회학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역사비교사회학의 갈등모델들은 대부분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동원을 통한 혁명과 국가의 붕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역사비교사회학의 다양한 혁명이론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조건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는 사회의 지배권력과 투쟁하기 위해 대중동원을 이끌어내는 힘과 국가가 국가 내 구성원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요인 및 정당성 상실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¹². 위의 책, p. 219.

이 같은 역사비교사회학의 갈등모델로는 무엇보다도 근대화에 이르는 세 가지 경로를 강조한 배링턴 무어의 역사사례연구가 잘 알려져 있다. 즉, 무어는 미국,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경로, 일본, 독일, 프러시아 등의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와 같은 파시스트국가로의 경로, 러시아, 중국과 같이 농민반란과 대중동원, 사회혁명에 따른 사회주의국가로의 경로 등을 구분한다.¹³ 근대화의 경로에서 민주주의의 길은 봉건지주가 소작계약에 따른 농민을 고용된 농업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자본가가 되고 이들이 부르조아지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시스트국가의 길은 전통적 지배양식을 통해 농민을 토지에 잡아두는 조건에서 국가관료와 지주가 동맹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길은 토지귀족이 부재지주가 되는 한편 가혹한 지대와 상품판매가격의 하락에 따라 착취의 구조에 대한 불만이 가중됨으로써 대중동원과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어의 이러한 갈등모델은 적어도 근대화과정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주요국가의 근대적 변동이라는 특수한 갈등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지주와 농민계급, 국가관료라는 구체적인 분석단위들 간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모델은 추상수준이 높은 일반갈등이론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특수한 갈등사례를 통해 근대사회의 정치사회갈등을 분석하고 있다. 역사비교사회학의 갈등모델은 마르크스의 혁명과 대중동원의 조건을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업경제에 결부된 농민사회에 적용한 페이지의 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에도 주목할 수 있

¹³-B.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I
II
III
IV
V
VI

다.¹⁴ 또 혁명상황과 자원동원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조건을 이론화 하는데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론을 보다 특수한 역사적 사례에 접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설명력을 확보한 톨리의 동원모델¹⁵도 역사비교연구의 중요한 갈등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역사비교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갈등모델은 스카치폴의 국가와 사회혁명에 관한 분석이다.¹⁶ 스카치폴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과 1917년의 러시아혁명, 1949년의 중국 공산혁명의 비교분석을 통해 혁명적 상황은 국가와 계급지배에 대한 정치군사적 위기의 출현으로 인해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군사적 행동에서 실패하고 농민들의 잠재된 대중동원이 발생하며 귀족계급의 적대심이 생겨날 때 전면적인 사회혁명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스카치폴의 갈등모델 이외에도 17, 18세기 농업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혁명과 반란을 인구성장의 궁극적인 영향으로 설명하는 잭 골드스톤의 국가붕괴에 관한 설명방식도 주목할 만하다.¹⁷

이러한 비교역사사회학의 다양한 갈등모델들은 토지기반의 사회구성체가 근대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과 정치변동에 주목함으로써 농민층과 노동자층의 계급저항을 핵심적 갈등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사회갈등은 불평등한 사회체계로부터 출현하는 계급갈등이라고 할

¹⁴- J. Paige, *Agrarian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Export Agriculture in the Underdeveloped World* (New York: Free Press, 1975).

¹⁵- C.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 Addison-Wesley, 1978).

¹⁶- T.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¹⁷- J. Goldstone, *Revolution and Rebell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회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기초로 이러한 계급갈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사회변동의 과정을 거쳤다.

서구 선진자본주의사회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분배의 효과에 따른 계급타협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통해 계급갈등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사회민주적 합의사회의 모델을 만들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동구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계급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의 패러다임을 구축했고 잔여적 계급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통합사회의 모델을 유지했다. 이른바 제3세계로 불렸던 주변부 저발전 사회의 경우 군부주도의 정치동맹에 따른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개발독재국가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3세계의 사회통합은 저항계급에 대한 강력한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통합사회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처럼 냉전적 조건에서 국가이념에 의해 계급갈등을 규제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통합사회는 동구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1990년대 탈냉전의 지구적 사회변동과정과 함께 통합된 사회로서의 특징보다는 새로운 사회갈등이 보편화되는 ‘갈등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¹⁸ 냉전적 이념과 중앙집중화된 국가주의의 통제에 따라 강력하게 통제되었던 사회갈등은 1990년대 이후의 지구적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는 탈이념의 정치변동과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탈근대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갈등형태의 등장, 지구적 시장화의 경향에 따른 국가 중심성의 약화 등은 사

¹⁸ 조대엽,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pp. 179~210.

I
II
III
IV
V
VI

회갈등을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현대성의 거대전환을 추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세계 시장주의의 팽창으로 귀결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갈등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지구화 경향과 성찰적 근대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반영하는 최근 사회변동의 경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의 거대경향에서부터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욕구의 정치화 현상까지 포괄하는 사회변동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갈등사회의 경향이 현대성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회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적어도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의 효과가 현실의 갈등현상에 반영됨으로써 각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 자유진영의 경우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의 경로를 갖는 반면, 시장경제로 전환한 사회주의국가와 북한과 같은 현실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의 경로에 들어서 있다. 나아가 제3세계 지역에서는 주변부적 특성의 갈등사회가 전개될 수 있다.

이 같은 ‘갈등사회’는 탈냉전과 세계시장주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연속적 혁신과 탈근대의 문화변동이라는 지구적 사회변동의 과정으로서의 현대성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을 일반갈등 이론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으로서의 사회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탈냉전 이후의 사회변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회갈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당대적 보편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사회론의 시각에 다루어지는 사회갈등 현상은 갈등의 보편성과 갈등의 역사적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과 신자유주의 갈등사회

가. 냉전·국가주의 역사국면의 갈등구조와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역사를 서로 다른 층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가장 표층에는 단기적 시간 안에서 전개되는 사건사가 있고, 중간층에는 이른바 국면사(histoire conjoncturelle)가 보다 광범한 역사의 리듬을 좇아 전개 된다. 이러한 국면사는 특히 물질적 삶의 차원, 경제적 주기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국면사를 넘어서면 전 세기를 문제 삼는 구조사 혹은 장기지속사가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사건’에 대해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작동하지만 ‘국면’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¹⁹

이러한 브로델의 국면사를 준거로 할 때 하나의 역사적 국면은 수백 년에 걸친 장기지속의 역사 속에서 수십 년 단위로 형성되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한다. 역사적 국면은 당대의 세계질서와 국내에 응축된 정치경제적 조건의 구조 속에서 정치권력과 경제체제, 계급질서와 계급투쟁, 문화구성과 사회적 욕구, 사회운동 등의 요소들이 결부되어 해당 ‘역사국면’에 독특한 ‘역사적 프레임’을 형성한다.²⁰ ‘프레임(frame)’은 개인들이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각하고, 위치지우며, 구별하고 이름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을 의미한다.²¹ 따라서 프레임

¹⁹ 페르낭 브로델, 김영범 역, “사회학과 역사학,” 신용하 편, 『사회사와 사회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pp. 131~132.

²⁰ 조대엽, “4월 혁명의 순환구조와 6·3 항쟁: 역사주기론의 시각,”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pp. 5~6.

은 사건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을 조직하게 하고 개인적 행동이나 집합적 행동을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프레임의 논리를 확장할 때, 특정의 역사적 국면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프레임’은 해당 역사국면의 개인, 집단, 조직이 현실의 조건을 해석하고 정치적 지향을 설정하게 하며 사회운동을 조직하게 하는 거시적 규정력을 갖는다.²²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은 새로운 역사적 국면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 진영은 격렬한 이념경쟁과 함께 세계자본주의의 국제 분업질서에 따라 이른바 냉전의 질서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냉전의 질서 속에서 자유주의이념과 사회주의이념을 국가이념으로 한 중앙집중화된 강력한 통제기구로서의 국가주의가 민족국가의 핵심적인 구실을 이루면서 ‘냉전·국가주의’의 역사적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냉전·국가주의 역사국면의 한국적 특수성은 분단·국가주의의 역사적 프레임을 형성했다. 동서양 진영의 이념대결과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라 한반도에는 분단체제가 형성되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의 질서는 빠르게 고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 이후 정부수립의 시기에서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냉전·국가주의 역사프레임이 한반도에 내재화된 하나의 역사적 국면으로 본다. 이 시기는 민족분단이 고착화되고 외세의 규정력이 극대화된 ‘분단적 상황’과 민간에서 군부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억압적 ‘국가주의’가 결합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분단

²¹-E. Goffman,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²²-조대엽, “4월 혁명의 순환구조와 6·3 항쟁: 역사주기론의 시각,” p. 6.

·국가주의’의 역사적 국면이라 규정될 수 있다.

구한말과 일제, 미군정의 시기를 강대국의 외압과 직접침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과 근대민족국가건설의 과제가 하나의 거대 프레임을 형성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정부수립 이후는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근대적 국민국가의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사회발전과 정치변동의 쟁점이 제기되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 시작된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사회갈등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저항운동은 근대국가의 규정력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민족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투쟁과 국민국가의 질서 내부에서 작동하는 사회운동은 서로 다른 역사적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를 새로운 역사국면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단·국가주의 역사국면에서 남한의 경우 가장 중요한 모순구조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었고 이러한 모순구조는 사회갈등의 상존하는 원천이 되었다. 분단 상황에서 남한에 수립된 억압적 군부권위주의 국가는 언제나 통일지향의 진보적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격렬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분단·국가주의 국면의 가장 기본적인 갈등구조는 시민사회의 민족민주운동과 권위주의 국가권력 간의 갈등구조였고, 그러한 갈등구조는 1987년 6월 항쟁을 분수령으로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분단·국가주의 역사국면의 시기 동안 사회갈등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던 저항운동의 흐름은 ‘민족민주운동의 주기’로 설정할 수 있다.²³ 이러한 저항운동의 주기는 1960년 4월 혁명을 출발로 해서 1964년의 6·3항쟁, 1970년대 반유

²³ 위의 글, pp. 7~9.

I
II
III
IV
V
VI

신운동, 1970년대 말의 부마항쟁과 1980년의 광주항쟁, 나아가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연속적 민족민주운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1980년대 말 동구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세계질서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맞게 되었다. 동구의 붕괴와 함께 그야말로 명백한 탈냉전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냉전적 이념은 효용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1980년대 초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시장화경향은 1990년대 들어 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냉전적 이념이 쇠퇴한 가운데 거칠 것 없이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향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계와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앙집중적 민족국가의 사회통합 기능을 크게 위축시켰다. 말하자면 ‘탈냉전·시장주의’의 새로운 역사국면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냉전·국가주의에서 탈냉전·시장주의로의 역사국면의 전환은 직접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탈이념 시대의 도래에 그 요인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적 국면을 지배하는 거대한 역사적 프레임으로서의 탈냉전·시장주의는 지구적 사회변동의 거대한 전환의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전환의 요인으로는 지구화, 민주화, 정보화의 거대경향에 내재된 신자유주의 시장화, 민주적 권력분산, 정보기술혁신과 소통경로의 팽창, 탈근대의 문화적 욕구의 팽창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구적 사회변동의 요소들은 탈냉전·시장주의의 역사국면에서 현대성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하는 ‘갈등사회’를 출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탈냉전·시장주의의 역사국면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국가에 의해 통제된 사회통합의 원리가 해체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갈등이 보편적으로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지구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

의 이념의 종료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지구화경향에 따른 시장주의의 급속한 팽창은 사회의 결속과 공동성을 해체하며 벌거벗은 이익만이 질주하는 사회로 전환하게 했다. 이러한 현실은 거대 자본의 위협과 경쟁의 강화에 따른 기회박탈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양극화 경향의 확대에 따른 갈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민주적 권력분산을 강조할 수 있다. 중앙집중적 사회통합의 구심이었던 국가권력이 약화되는 경향과 함께 사회구성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와 시장권력으로 분산되는 한편, 지역적 수준에서 중앙권력이 지방화되는 과정을 통해 자치적 권력으로 분산됨으로써 갈등에 대한 통제가 분산되는 경향을 갖게 되어 갈등을 봉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셋째, 정보기술혁신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네트워크의 팽창을 들 수 있다. 언론 및 방송의 민영화, 다중 채널화, 전자정보기술의 확대에 따른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망의 확대 등은 정보의 전달과 확산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요구와 욕망을 자유롭게 소통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적 소통의 질서는 갈등의 제도화 기제이자 갈등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넷째, 탈근대적 문화지향과 탈물질적 가치의 확대는 갈등사회로의 전환을 가속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정체성의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차이의 표출과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 등은 환경가치, 평화의 가치, 인권의 가치, 건강가치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이 확산시킨다.

결국 이 같은 사회변동은 사회경제구조의 위기와 정치적 통합의 위기, 사회적 결속의 위기, 삶의 패러다임의 모호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갈등을 일상화하는 한편 갈등을 제도화하는

I
II
III
IV
V
VI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은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에서 나타나는
갈등사회는 자유주의 진영의 경우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로 유형화되
며, 사회주의 진영의 경우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로 유형화할 수
있다. 양자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경로에서 설정되는 갈등사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의 공통된 효과
를 반영하고 있다.

나.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와 남한의 갈등구조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현대성을 규명하는 대부분
의 서구 사회학 담론들은 현대성의 변화와 관련해서 대체로 사회 해
체적 경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사회에서 갈등현상
의 보편화와 일상화 경향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대성을 해명하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탈근대의 사회변동을
2차적 근대 혹은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로 보는 시
각²⁴은 위험사회론²⁵과 함께 가장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성찰적
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의 체계가 다룰 수도 없고 동화시킬 수도 없는
위험사회의 결과와 자기 대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사회
의 도래와 함께 고전적 산업사회의 기본갈등이었던 재화(goods)를

²⁴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 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1998); 올리히 벡, 문순홍 역, 『정치의 재발견: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서울: 거름, 1998); 올리히 벡, 정일준 역,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자유의 아이들과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민주주의』(서
울: 새물결, 2000).

²⁵ U.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Calif: Sage Publications,
1992).

돌리싼 분배의 갈등은 재해(bads)를 돌리싼 분배의 갈등에 의해 압도된다. 또 재화의 생산에 수반되는 위험—원자력 및 화학과 관련된 거대기술, 유전자연구, 환경에 대한 위협, 과잉군비확대, 서구산업사회 외부에서 강화되는 빈곤화 등—이 분배되고 저지되고 관리되며 정당화되는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한다.²⁶

현대성의 특징을 해체화(disorganization)로 규정하는 입장은 보다 명시적으로 갈등사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합의사회에서 갈등사회로 전환함으로써 해체적 경향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갈등사회에서 사회갈등의 원천은 사회경제적 변동과 인종적·문화적 긴장,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종교적·가족적 정체성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제도적·집단적 통합가능성의 약화, 나아가 노동시장에 대한 미래전망의 부재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은 구조위기와 규제력의 위기, 나아가 사회적 결속의 위기를 드러내면서 갈등은 더욱 증대한다.²⁷

현대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를 경제영역 뿐 아니라 사회, 문화영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 과정으로서의 세계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을 균열사회(disintegration society)로 보는 악셀 호네프의 현대성에 관한 입장도 갈등사회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네프는 이러한 균열사회의 구성원리를 감정적 차원과 법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 세 가지 영역에서의 상호인정 과정으로 보고 있다. 법적, 사회적 인정이 유보되고 있다는 의식이 집단적으로 공유될 때 사회운동이 생성되는데, 호네프는 이른바 인정투쟁이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보편

²⁶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 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²⁷ 빌헬름 하이트마이어, 김희봉·이홍균 역, “해체사회,” 아르민 폰스 편,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서울: 한울, 2003).

화된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²⁸ 다른 한편 오늘날 발달된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일상화된 사회운동에서 찾는 경향도 있다. 말하자면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토양에서 다양한 개인, 집단, 운동이 추구하는 이슈, 요구, 저항들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확산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이른바 ‘갈등의 정치(contentious politics)’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갈등정치가 일상화된 사회를 ‘사회운동사회(social movement society)’라고 전망한다.²⁹

이러한 현대성의 학술담론과 아울러 투명사회론,³⁰ 네트워크사회론³¹ 등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팽창에 기초한 공론영역의 확장, 나아가 지구적 공론영역의 확장을 강조한다는

²⁸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동녘, 1996).

²⁹ 사회운동사회는 서구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사회로의 변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운동의 성공이 가져온 운동의 제도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어와 테로우는 갈등정치의 경향을 통해 전통적 사회운동과는 다른 현대 서구사회의 운동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운동사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첫째, 사회적 저항은 이따금씩 나타나거나 돌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현대적 삶에 상존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점은 현대 민주정치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둘째, 저항행동의 발생빈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다양한 구성원과 아울러 광범한 영역에 걸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문화와 제도화는 주창활동의 주요수단이었던 사회운동을 제도정치영역 내적수단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사회는 주창의 방식 가운데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양식이 늘어나는 반면 격렬하고 근본적 이슈의 저항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갈등이 확산된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D. S. Meyer and S. Tarrow,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J. 러셀 달턴·만프레드 쿠힐러·빌헬름 뷔르클린, 박형신·한상필 역, “새로운 운동의 도전,”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서울: 한울, 1996).

³⁰ G. Vattimo, *The Transparent Socie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³¹ M. Castells,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MA: Edward Elgar Pub, 2004).

점에서 갈등사회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

해체와 탈중심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이 같은 다양한 현대성의 담론들은 ‘갈등사회’의 전망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담론들은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탈냉전의 사회변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시장화 경향에 따라 시장자유주의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된 해체화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성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는 무엇보다도 갈등의 형태와 갈등과정, 갈등의 결과에 있어서 이전의 산업사회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갈등사회는 근대 산업사회의 근본적 사회구성요소—계급, 민족, 국가—와 관련된 갈등보다는 환경, 노동, 식품, 교육, 주택, 보건의료, 여성, 노인문제 등 일상의 삶과 관련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삶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가치—생명, 평화, 환경, 인권, 평등 등의 가치—도 안전한 삶을 지향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의 이슈가 되고 있다. 셋째, 공공갈등의 이슈가 일상과 사적 삶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 문화의 정치화, 사적 이슈의 공공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일상적 삶과 관련된 수많은 갈등이슈가 정치화되면서 갈등의 빈도 또한 일상적 수준으로 증대하며 갈등과정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적 토론과 쟁점화 과정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전자정보공간에서 활동하는 전자적 대중이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갈등을 이슈화하고 참여함으로써 갈등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에서 갈등의 결과는 사회해체를 가속화하는 경향과 함께 자율적 결속의 강화경향을 동시에적으로 갖는다.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에서 사회갈등은 성찰성의 증대와 역동성의 증대 나아가 균열의 증대에 따라 해체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갈등

I
II
III
IV
V
VI

의 일상화와 제도화 경향을 동반함으로써 갈등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책임성 증대, 정치적 조정능력의 증대에 따라 자율적 공공성이 확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남한사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에서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의 지구적 흐름에 동반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정보화, 지구화의 빠른 변화는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의 보편적 사회변동을 빠르게 내재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은 더욱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2005년에 실시한 사회갈등에 관한 의식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2007년의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집단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응답했다.³²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와 같은 거대한 시민행동이 전개됨으로써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 같은 거대한 시민행동은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의 갈등과정이 여전히 제도화의 뚜렷한 한계를 갖는 이슈와 영역이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갈등이 실제로 모두 동일한 수준과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³³ 갈등은 이슈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남한사회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은 대체로

32. 한국여성개발원,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07 한국사회의 갈등의 식조사』 (서울: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07).

33.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회갈등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갈등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역시 90% 이상이 없다고 답한다; 한국여성개발원, 위의 책, 이점은 미디어와 같은 공론장에는 사회갈등이 심각하게 보편화되어 있으나 실제의 갈등은 시민단체나 여타 조직의 수준에서 제도화된 갈등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와 시민사회영역의 갈등이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³⁴ 먼저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이슈들은 ‘이념’의 수준과 ‘정책’ 수준, ‘정치관행’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념수준은 구체적인 갈등이슈가 친북과 반북,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탈냉전의 시장주의 역사 국면에서 좌우의 정치이념이 무의미해진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에서도 분단체제의 잔영으로 인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수준의 갈등은 법률 및 제도의 신설, 변형, 폐지와 관련된 갈등을 의미한다. 정책수준에서의 갈등은 정부나 의회, 정당 등에서 제안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안적 정책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갈등의 형태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관행의 수준은 통치자 개인이나 정치세력에게 관례화된 정치적 태도나 실천방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이다. 정치관행 수준의 갈등은 대체로 정부나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갈등의 구체적인 이슈에 따라 이러한 각각의 갈등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갈등의 형태는 제도화된 갈등과 비제도화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화된 갈등은 제도적 절차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³⁴ 이러한 유형화의 자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과 관련된 기사 135건을 검색한 후 이를 공통된 이슈로 묶고 다시 범주화했다. 한겨레 신문 인터넷사이트에서 ‘시민단체’를 1차 검색어로 해서 추출된 기사 가운데 기업과 기타영역에 관련된 기사는 제외하고 정부와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기사 135건을 추렸다.

I
II
III
IV
V
VI

갈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청회, 공개토론회, 성명서, 집단서명, 언론을 통한 논평, 캠페인, 1인 시위를 비롯한 합법적 시위 등이 이러한 갈등형태에 포함된다. 반면에 비제도화된 갈등은 불법집회나 대규모 가두행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장외 투쟁형태를 의미한다.

먼저 정책수준에서의 갈등은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에 걸맞는 기업 규제정책의 완화 및 폐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9·19 부동산대책을 비롯해서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갈등이슈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의료민영화와 교육자율화, 미디어관련법 개정, 신문방송검열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자율화와 관련된 갈등이슈들 또한 정책수준에서 나타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슈는 대부분 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는데 갈등의 형태는 공개토론회나 성명서발표, 반대서명, 언론을 통한 논평 등 제도화된 갈등이 일반적이다.

다른 한편, 정책과 정치관행의 두 가지 수준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갈등의 범주는 대운하 관련 갈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후속적 효과로 나타난 시민사회 규제 관련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격렬한 갈등양상을 드러낸 한반도 대운하갈등과 미국산 쇠고기갈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관련된 갈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갈등적 정치과정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치관행은 다양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시민사회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갈등 역시 비밀보호법이나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법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갈등이 있는 반면, 정부감사나 검찰 수사 등 정치관행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갈등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갈등형태의 측면에서 대운하 갈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갈등, 시민사회 규제 갈등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장기간의 거대한 시민저항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거리의 정치로 표현되는 비제도화된 갈등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범주들이 비제도화된 갈등형태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이나 논평,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문화제와 같은 제도화된 갈등형태가 병행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이 같은 사회갈등은 세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이념갈등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념갈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슈는 역사교과서문제와 같은 쟁점이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갈등이슈에는 이념갈등이 중첩되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의 이념갈등은 잔여적 형태의 이념갈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쩌면 이념의 외피를 쓴 이익이 갈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는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대부분의 갈등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장기간 전개된 갈등방식은 촛불시위와 같은 비제도화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비제도화된 동원의 주체가 바로 시민단체와 같은 기존 조직운동의 주체들이 아니라는 점이다.³⁵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시민운동은 2000년대 이후 성장한 탈조직적 시민사회영역에 해당하는 제4의 결사체가 동원의 새로운 주체가 됨으로써 시민행동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갈

³⁵ 이러한 세 가지 특징과 함께 비제도화 된 거대갈등의 이슈가 한반도대운하 및 쇠고기 문제와 같은 생태, 생명 등 삶의 문제와 연관된 이슈라는 점은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적 특징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I
II
III
IV
V
VI

등양상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광범한 저항행동을 보여준 촛불집회는 무엇보다도 온라인을 매개로 한 제4의 결사체가 ‘급진적 개인주의’를 ‘집합적 행동주의’로 전환하는 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 남한사회의 갈등형태와 관련된 이 같은 특징은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양식이 이처럼 제도화되고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와 같은 비일상적이고 비제도적인 거대 시민행동을 드러내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요인은 현대 남한사회의 정치과정이 드러내는 주변부적 불안정성에 내재되어 있다.

3.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과 사회주의 갈등사회

가.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사회와 해체화의 경향

지구적 수준에서 새롭게 형성된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은 강력한 일원적 정치이념으로 통합된 사회주의사회에도 시장화의 경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 갈등사회의 전망을 가능하게 했다. 1980년대 말을 전후한 시기에 개혁, 개방이 확대된 사회주의사회는 현시점에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지역과 같이 완전히 체제를 전환한 시장경제사회가 있는가 하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시장경제를 강화한 사회가 있고, 북한과 같이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당국가체제가 약화되는 경향을 갖는 사회도 있다. 여기서는 근대 산업사회의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발전경로를 겪었던 이러한 후기 사회주의사회의 다양한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로 부르고자 한다.³⁶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로서의 북한사회는 현시점에서 사회주의 정치질서와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해체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는 탈냉전 시장주의 역사국면의 지구적 시장화, 정보화 경향, 지구적 네트워크화 현상 등에 따라 갈등사회로의 전환가능성을 드러내는 잠재적 갈등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잠재적 갈등사회로서의 북한사회 질서의 해체적 징후는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에 형성된 2차 경제의 질서에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의 '2차 경제' 개념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³⁷ 보다 구체적으로 2차 경제는 직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과 실정법에 위반하는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위기에 따라 합법적 수준의 사익추구활동이 허용되는 현실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계획경제의 영역과 계획경제 외적 영역을 구분할 때 각 영역에서 합법적 경제활동과 비합법적 경제활동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할 때 합법적 계획경제 영역의 활동은 1차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계획경제 영역 내에서의 비합법적 경제활동과 계획경제 외적 영역의 합법적 사익활동과 비합법적 사익활동은 모두 2차 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³⁶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경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의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배질서의 내적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단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포괄적으로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로 구분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후속의 논의가 필요하다.

³⁷ I. Kemeny, "The Unregistered Economy in Hungary," *Soviet Studies*, Vol. 34, No. 3 (July 1982), pp. 349~366.

I
II
III
IV
V
VI

것이다.³⁸

이러한 2차 경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 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사회에서 2차 경제활동은 199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하게 확대되었다.³⁹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제도가 위축되는 조건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식량과 소비재의 배급제가 한계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공식적인 국가배급제의 제약은 2차 경제활동이 광범하게 확산되는 조건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극심한 식량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배급제를 각 도, 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당국과 중국 및 러시아의 직접물물교환이 허용됨으로써 이른바 지방별 자력갱생전략이 강조되었던 것이다.⁴⁰ 식량배급의 중단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계층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식량의 사적 거래행위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현실은 식량의 중앙배급제와 생필품을 국영상점과 협동상점에서만 공급하는 유통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식량배급제와 상품 유통체계의 해체 경향은 이른바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경향에서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농민시장은 초기에는 텃밭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교환하거나 파는 등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농민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생활

³⁸- G.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September/October 1977), pp. 5~26.

³⁹-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2000), p. 77.

⁴⁰- 위의 책, pp. 80~81.

I
II
III
IV
V
VI

과 밀접한 경공업품의 증산정책이나 중국의 개방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다. 국경지대에 인접한 중국연변지역과의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중국의 교포상인들이 공산품을 북한의 골동품이나 해산물 등으로 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후 농민시장은 점차 준시장적 거래 행위가 확산되는 불법적인 암시장화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교환되거나 매매되는 품목이 점점 더 늘어나 식품, 주류, 수산물, 의류, 공산품, 의약품, 가전기기, 신발 나아가 공장과 기업소 등의 설비나 기자재까지 등장하고 있다. 거래 품목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⁴¹

중앙배급제와 공식적 유통체계가 와해되는 조건에서 2차 경제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계획경제 외적 영역의 합법적 사익활동으로는 개인텃밭, 폐기밭, 부업밭 등 농산물의 사적 경작과 가내작업반이나 개인부업반 등 가내수공업과 개인 서비스 활동 등이 확대된다. 한편, 계획경제 외적 영역의 비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으로는 간부층이 공장지배인, 당간부, 사회안전부 요원들과 결탁하여 자재와 원료를 조달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지하생산이 있는가 하면 밀무역, 사채 및 주택거래 등이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계획경제 내의 비합법적 경제활동으로는 기업소 간 뒷거래, 국영부문의 국가재산에 대한 절취행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외화 및 물자난 극복을 위해 무역거래를 지방분산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외화벌이와 관련한 불법활동 등이 확대되고 있다.⁴²

⁴¹ 위의 책, pp. 88~89.

⁴² 정세진, 위의 책, pp. 98~136;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2차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유럽국가 가운데 2차 경제가 가장 확대되었던 헝가리 보다는 작지만, 구소련사회보다는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월간 통일경제』, 2월호 (현대경제연구원,

탈냉전 사회주의사회의 2차 경제는 사회주의 질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 가운데 첫째, 정치적 영향으로 정치권력구조의 분산화와 약화 경향에 주목할 수 있다.⁴³ 주지하듯이 사회주의사회의 정치권력구조는 가부장적 지배방식을 통해 당국가조직 내부와 당국가조직과 일반주민의 관계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 규율과 지배관계를 유지해 왔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권력구조를 지탱하는 원천은 중앙계획경제체제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에서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경제의 쇠퇴와 2차 경제의 확장은 기존의 정치적 지배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적 특징으로서의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성은 적어도 자원의 확보와 분배기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 하부단위들 간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앙 정치권력의 재정능력 약화는 경제적 자립과 분권화를 강요하였고, 지역적으로 배급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당연히 당국가의 중앙권력은 영향력이 약화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분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위축과 2차 경제의 확대는 당국가체제의 간부층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당국가 상층 권력의 자원 확보와 배분의 능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간부들은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비공식적인 수입원을 가지게 되면서 상층권력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1997), p. 60.

43. 정세진은 북한의 정치권력구조의 분산화와 약화 경향을 계획경제의 침식에 따른 정치적 지배구조의 변화로 보고 중앙의 하부에 대한 통제력 약화, 당국가의 간부층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국가와 간부의 인민대중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pp. 137~192.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당국가의 상층권력과 간부들의 인민대중에 대한 통제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주민 수준에서 확보되는 비공식적 수입원은 그만큼 인민대중을 당국가와 간부층으로부터 분리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주의 2차 경제의 사회적 영향으로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의 새로운 사회분화와 계층화현상에 주목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일원화된 당국가체제는 정치적 위계에 따라 뚜렷한 계층화현상을 드러냈다. 국가에 의해 규정된 정치행정적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봉급과 주택, 식량배분, 교육, 소비패턴 등이 철저히 서열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치적 계층화’의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해체적 경향을 보이는 탈냉전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계층적 특성 또한 새로운 분화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차 경제가 확장되면서 비계획경제의 영역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따라 새로운 계층화가 전개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차 경제활동은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크게 다른데 무엇보다도 당국가의 간부층은 공적 직위와 기존의 자원을 기반으로 2차 경제에의 접근가능성이 높다. 동구나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영역의 확대는 기존의 노멘클라투라층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 현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정치권력을 가진 중상층의 간부들이 반(半)관료 반(半)사기업가로 변신함으로써 이들이 비합법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러시아의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유산계급의 형성과정에서 엘리트의 연속성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에 비견될 수 있다. 러시아의 신흥 사기업가들이 주로 구사회주의체제에서의 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국가나 당기구의 특권계급으로서의 노멘클라투라

I
II
III
IV
V
VI

와 지하경제출신이었기 때문이다.⁴⁴

다른 한편, 외화벌이 일꾼이나 자재인수원, 수매원 등 지역적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2차 경제에의 접근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탄광노동자와 같이 지역적으로나 특수생산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에 의한 계층의 분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⁴⁵ 이와 아울러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과정은 비록 정치적 위계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안정적이었던 계층구조가 소수의 부유층과 전반적인 하향화를 통해 양극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궁핍화 현상이 나타나고 계층구조의 극단적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사회주의체제에서 두터웠던 사회주의형 중간층—기술 지식층—은 교육수준과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체제전환과 함께 중간층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 기준이 의미를 갖지 못하고 화폐적 생산능력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사회주의 중간층의 일부는 시장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함으로써 대규모의 하향이동을 경험했던 것이다.⁴⁶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의 새로운 분화와 계층화 현상은 새로운 갈등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계층 및 계급갈등이 언제나 계급조직을 통해 집단적 행동의 가시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러한 가시적 계급행동은 사회구조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집단행동을 가시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

44. 조한범,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61~62.

45.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pp. 137~245.

46.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47.

제가 강한 사회일수록 계층 간의 갈등은 잠재화 되어 조직적 집단행동보다는 소극적 저항이나 일상적 저항으로 나타나기 쉽다.⁴⁷ 분명한 것은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에서 2차 경제의 확대는 광범한 정치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사회분화를 초래함으로써 갈등의 이슈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사회의 잠재적 ‘시민사회’와 일상저항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에서 계획경제의 해체경향은 사회적 관계의 망에도 동반적 변화를 가져왔다. 갈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문제일뿐더러 사회적 관계망의 결속정도는 갈등의 형태와 수준을 결정하는 기반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 관계망의 변화는 사회주의 갈등사회로의 전환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의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조망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적 관계망, 사적 관계망, 공적 관계망 등으로 나누는 유형구분이 유용성을 갖는다.⁴⁸ 이러한 유형화에 따르면 공동체적 관계망은 전통사회의 촌락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아직 개인, 국가, 시민사회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된 소규모 집단에서 집단의 집합적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주로 대면적 접촉을 통해 맺어지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사적 관계망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비인격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⁴⁹ 공적 관계망은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47.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98~99.

48.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2호 (한국사회학회, 2005), pp. 106~107.

I
II
III
IV
V
VI

국가의 관료제 기구에 국한되지만 사익보다는 전체 사회의 공익을 앞세우고 당국가의 전일적 체계가 사회를 재편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사회 관계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⁵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주민들은 인민반 조직이나 직맹, 여맹, 청년동맹 등 각종 근로단체와 당조직과 같은 공적 기구와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체제를 통해서 직장과 지역사회 내의 공적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 보장과 배급제를 통한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를 기초로 주민들을 관료제적 통제체제에 전일적으로 통합시키던 공적 관계는 존립이 어렵게 되었다. 공적 관계망

49. 장세훈에 따르면 사적 관계망은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그 구성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비인격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으로 주변사람과 맺어가는 사회적 관계라고 말한다;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p. 107.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사적 관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사적관계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적 이익의 관계’이고 시장적 관계이다. 따라서 정의에 포함된 시민사회의 형성과 사적 관계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호하다. 또 사적 관계망을 단순히 공적 관계망과 이분적으로 구분할 경우 전근대적 형태와 근대적 형태가 착종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공동체적 관계망을 사적 관계망과 구분해내고 있다. 이 경우는 각 관계망의 의미를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고 두 개의 관계망이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개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0. 장세훈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주의 건설 이전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짜여진 시기이고, 2단계는 사회주의 건설을 계기로 공적 관계망이 공식적 관계망으로 채택되어 지역사회 내로 침투하면서 경쟁 및 갈등이 벌어지는 단계이다. 3단계는 이러한 침투 및 경쟁과정을 통해 공적 관계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공식적 관계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공동체 관계망이나 사적관계망이 이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며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자리매김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단계는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잔존하던 공동체적 및 사적 관계망이 표면화되어 공적 관계망과 다시 경합을 벌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판도가 결정되는 단계를 말한다; 장세훈, 위의 글, p. 108.

에 의존해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조건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자조적 대응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확대되었던 것이다.⁵¹ 이러한 변화는 2차 경제의 확장에 동반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시장의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가내에서 수공품을 생산하는 사람, 수공업 생산자에게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 가내생산품을 받아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 중국 등지에서 물건을 반입하는 사람, 도매업자, 소매상 등 거래망과 연동되는 사적 관계망이 새로운 관계망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⁵²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에서 사적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공적 관계망과 공동체적 관계망이 사적 관계망으로 포섭되거나 변질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⁵³ 기업소에서 작업반장이나 고참노동자를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 개인적으로 노동력을 파는 현상이나 교사가 학부모를 통해 부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 나아가 의사가 병원지급용 약을 유용해서 환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직장의 공적 관계망이 이윤추구를 위한 사적 관계망에 포섭되는 사례들이다. 이와 아울러 가족, 동창, 친구 관계와 같은 공동체적 관계가 사적 이익의 관계망과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⁵⁴ 사적 이익의 관계망이 가족, 친척과 같은 공동체적 관계망과 중첩되는 것은 시장활동의 영역이 2차 경제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사적 이익의 관계를 갖게 되는 자연

51. 장세훈, 위의 글, p. 121.

52.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74.

53.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p. 126.

54.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275.

I
II
III
IV
V
VI

스런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득이라는 근대적 관계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⁵⁵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사회관계망의 변화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해체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공적 관계망의 해체 경향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사적 이익의 관계망과 공동체적 관계망은 무엇보다도 ‘사적 담론’이 소통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철저하게 이념화된 사회주의 국가윤리가 공적 담론의 내용이었던 것에 비해 비공식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적 담론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⁶ 첫째, 이념보다는 물질에 대한 담론이 중심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이념 과잉의 공적 담론에 비해 새로운 사적 담론은 소비생활이나 장사 등과 같은 경제부문이 소재가 되고 있다. 둘째, 체제나 구조보다는 일상 생활과 개인적 관심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새로운 사적 담론은 지극히 개인적 삶이나 취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지향의 집단주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담론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과 일상에서 남한 관련 대화와 변화하는 정세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비교적 단순주제가 반복되는 공적 담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넷째,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내용상의 차이는 현시점에서 대립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은 뚜렷한 차이를 갖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공적 담론의 대항담론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⁵⁵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 2008), p. 168.

⁵⁶ 위의 책, pp. 178~179.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에서 공적 관계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적 관계망의 형성과 사적 담론의 확장현상을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자본주의 질서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영역 및 시장영역과 구분되는 의사소통의 질서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이분적 공과 사의 질서로 구분할 경우 시민사회는 시장영역과 함께 사적 영역에 포괄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공공성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진영의 갈등사회로 유형화되었던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에서 얼핏 보아 계획경제가 해체의 과정에 있고 시장경제영역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사적 관계망과 사적 담론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탈냉전 사회주의 시민사회의 전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시민사회가 분화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질서를 넘어서는 자율적 공공성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한 질서는 자율적 시민이 생산하는 공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화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의 사적 관계망은 공공적 관계라기보다는 사적 이익의 관계에 머물고 있으며, 사적 담론 역시 경제적이고 개별적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에서 사적 관계망과 사적 담론은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잠재적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에서 저항행동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저항의 형태에 머물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일상적 저항은 생계유지를

I
II
III
IV
V
VI

위한 타협 및 흥정과 비합법행위, 밀수나 마약 등과 같은 강력한 위법 행위, 자본주의 문화를 사적으로 향유하는 행위, 정치교육이나 생활 총화 등 사상통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⁵⁷ 여기에 탈북이나 난민화 등과 같은 일종의 회피적 저항형태가 구분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상적 저항은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소극적 저항이기는 하지만 삶의 공간 도처에서 정치권력의 지배의 망과 체제규범을 벗어나 있는 행동들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일상저항 자체가 실제적인 갈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에서 이러한 사적 관계망과 사적담론 나아가 일상적 저항의 여러 형태들은 잠재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사회주의 시민사회와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잠재적 갈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사회의 경우 사회주의 갈등사회 역시 구조화된 갈등사회로의 전환의 과정에 있는 잠재적 갈등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4.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의 전망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상존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사회학의 일반이론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갈등현상에 대해 보다 추상적이고 법칙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역사화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역사적 현상으로서 사회갈등을 다루는 시각은 역사비교사회학의 혁명과 국가붕괴를 설명하는 다양한 사례들로 다루어진 바

⁵⁷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279.

있다. 갈등현상의 역사성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시각으로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확장되고 있는 지구적 시장화 경향이 드러내는 새로운 갈등현상 그 자체를 현대성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사회변동적 특성을 ‘갈등사회’로 부르거나 한 것이다.

갈등사회적 전환은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역사적 국면의 전환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붕괴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냉전·국가주의 역사국면으로 보고 그러한 역사국면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분단·국가주의 역사국면으로 보는 한편,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국면을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으로 보고자 한 것이다. 적어도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에서 갈등사회적 변동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이러한 보편성은 사회마다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다. 즉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에서 자유시장경제사회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로 유형화될 수 있고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로 유형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는 국가 중심의 통합사회가 해체의 경향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능이 시장과 시민사회에 재배치되는 한편 갈등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적 사회변동을 드러내고 있으나 주변부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갈등사회를 준거틀로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주목했다. 적어도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경제난에 따라 당국가체제에 의해 전일적으로 통합된 모습을 보였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해체의 경향을 띠는 것은 사회주의 갈등사회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2차 경제의 확장을 강조

I

II

III

IV

V

VI

하고 그러한 경향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으로는 정치적 지배질서의 해체경향과 사회적 영향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분화와 계층화 현상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회적 연결망에 있어서 사적연결망의 확산과 사적 담론의 확대, 일상적 저항의 확대 등은 당국가체제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통합되었던 북한 사회의 해체적 경향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회를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로 전망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이러한 해체적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체적 징후들은 냉전이데올로기로 강력하게 통합되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흔들리면서 전환기 사회주의사회의 갈등사회적 변동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시장은 등장했으나 아직도 시민사회는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한 사적 담론의 공공화도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렵다. 어쩌면 현 시점은 국가일체의 공적 담론이 해체되는 경향성이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공공성은 논의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갈등사회로의 전환에는 시민사회의 확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의 갈등사회적 성격은 잠재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사회 역시 잠재적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적 시장화 경향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확장,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확대 등은 북한을 갈등사회적 전환의 예외국가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적 변동은 더욱 추동될 것이다. 또한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라 사적 이익추구활동이 크게 늘어났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적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사적 이익의 증식을 위해서도 공론의 영역이나 시민사회의 공간은 출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활동영역이 생기게 되

면 사회주의 시민사회와 탈냉전 사회주의 갈등사회 전망은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다.

I

II

III

IV

V

VI

Ⅲ. 북한의 사회갈등구조

1. 사회주의 사회갈등의 배경

사회갈등의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갈등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적 가치와 이를 지향하는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주의의 경우는 비물질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이윤추구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주의는 시장을 계획(plan)으로 대체하는 한편 개별적 이윤추구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의 차이와 아울러 지향되는 가치의 특성들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부터 비롯된다.

사회갈등의 가장 중요한 재화의 분배과정이 자본주의체제의 경우 시장을 매개로 한 거래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거래와 이윤추구의 관계는 계획경제체제의 행정-명령관계로 변화하며, 경제적 관계가 정치적 관계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인다. 자본주의체제의 자본과 노동 간의 긴장관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적 긴장과 갈등관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당료와 비당료의 관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사회갈등과 관련된 지형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와 상이한 사회주의경제의 특성, 불평등 구조, 그리고 사회주의 인성의 특성들은 사회주의체제의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사회갈등의 가장 중요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사회주의 주민들은 정치적 순응의 대가로 사회주의형 복지를 제공 받았다. 사회주의의 주민들은 시장경제체제의 경쟁과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대신 일상적 삶이 다양한 통제의 대상이 되는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국가와 공동체는 소유의 유일한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대신했다. 시장의 조절기능은 국가가 대신했으며, 경제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계획경제는 행정-명령이라는 관료적 방식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국가기구는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의 금지와 아울러 분배는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에 의거했다.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재화의 분배는 시장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 역시 경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 권력기구의 당료와 계획기구의 엘리트, 재화의 분배에 관여하는 배급체제의 중요한 지위들, 그리고 국유재산의 합법·비합법적 이용 권한은 점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자본주의사회의 자본가의 영향력을 능가했다. 사회주의에서 집합적 소유로 포장된 소유의 익명성은 국유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수탈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 같은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에서 국유재산의 처분권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⁵⁸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pp. 4~8.

었다. 이는 재화의 분배와 관련,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다른 형태의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점에서 사회주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던 지하경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⁹ 지하경제는 사회주의의 구조적 산물로 제2경제(second economy), 저항-경제(counter-economy), 비공식경제(unofficial economy), 평행시장(parallel market), 사기업(private enterprise),⁶⁰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회색경제(gray economy), 제4부문(fourth sector)⁶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지하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 양자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그 형태와 특성은 매우 달랐다.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지하경제는 주로 탈세와 밀수 등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와 제도의 회피를 통한 이득의 추구라는 성격을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의 지하경제는 사회주의 행정-명령형 계획경제의 특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결핍경제(shortage economy)⁶²에 대한 적응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의 지하경제는 수요와 공급 간의 항상적인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었다. 물자부족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핍경제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은 지하경제의 항상적인 기능화 조건이었다. 지하경제는 형식적으로는 비합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련사회의 지하경제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스뻘라찌야(매점매석, 재판매)’ 이외에 비공식부분, 장부조작,

⁵⁹- 위의 책, pp. 57~70.

⁶⁰-G.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 25.

⁶¹-S.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 46.

⁶²-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I
II
III
IV
V
VI

그리고 범죄성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³ 비공식부분은 거의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공식통계에는 잡히지 않았고, 또 고의적으로 누락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농민들에 의한 생산물의 비공식적 판매이다. 개인주택의 건축과 수리, 제조품수리, 그리고 맞춤형복 등은 공식경제부문에는 아예 없거나 부족했던 부분으로, 비공식적 구조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서류의 허위작성을 통한 방법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지하경제는 사회주의 주민의 생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존재였으며, 일상적인 경제문화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유재산의 수탈과 지하경제가 만연한 반면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는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사회주의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어 간 수많은 문제들을 잉태했다. 결핍경제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사회주의 경제는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부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주의의 주민들 역시 결핍경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회주의 역시 산업사회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와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산업사회로의 진입을 통한 발전의 결과들 예를 들어 공업화 수준, 문맹의 퇴치 및 교육수준의 상승, 사망률의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 도시화, 남녀차별의 철폐, 핵가족화 등은 산업화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평등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들을 형성했다.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달리 주민들은 계획경제의 목표 달성의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인식되어졌다.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한

⁶³ T. Корягина,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3 (Москва: 1990).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기업지배인들을 관료화 시켰으며, 수동적이면 서도 국가의존적인 노동자문화를 잉태했다. 필수 생필품의 생산조차 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주의사 회는 체제해체에 이르는 물리적, 사회적인 하향화 과정을 경험해야 했다.⁶⁴ 이는 사회주의 행정-명령경제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다음 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⁶⁵들에 기인한 것이었다.

첫째, 기업들은 보다 적은 계획생산량을 할당받는 반면 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노동자들은 작업할당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셋째, 기업들이 과학,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 무감각했다.

넷째, 생산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메커니즘은 낭비적 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섯째, 방만한 경제체제를 밀도있는 집중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생산효율성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말기에는 경제성장은 사실상 정체되었으며, 사회주의 주민들은 결핍경제로 인한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이는 사회주의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신뢰의 철회와 아울러 미 래에 대해서도 전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⁶⁴-Г.П. Черник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то он?*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 ные отношения, 1992), С. 190.

⁶⁵-Ф. 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 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С. 19~21.

나. 불평등체제

불평등체제는 사회주의 사회갈등의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시장은 계획으로 대체되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가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사회불평등은 자본주의체제와 상이한 구조를 지닌다. 자본가와 부농 등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철폐는 사회주의의 평등사회 구현의 징표로 선전되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는 노동자, 농민국가라는 선전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객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공식적 주장과 달리 사회주의체제에서 소멸한 것은 자본주의적 불평등구조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⁶⁶

사회주의 체제는 사유재산 금지를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구조를 소멸시켰지만 체제의 부와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권은 자본가가 아닌 또 다른 특정인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이는 불평등의 또 다른 기원으로 작용했으며, 사회주의적 계층화를 가능케 했다. 사회주의체제의 계층화의 기원은 정치권력의 관료제적 특성과 분업에 의해 파생된 역할구조로부터 비롯된다.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특정인들이 권력과 위신 그리고 특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계체제를 만들었다. 평등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사회의 이상적인 가치였지만,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은 이와는 달랐다.⁶⁷

⁶⁶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pp. 8~13.

⁶⁷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 159.

사회주의체제 전반 특히 소련에 있어서 불평등 및 사회의 계급·계층구조의 이해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적 동질화’와 ‘새로운 특권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경향이 사회주의체제에 병존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주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났다. 소련사회의 계급구조 변화과정은 대체적으로는 사회적 동질성의 증가경향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사회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계급·계층 분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소련사회의 불평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체제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주요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기능적인 전문화를 낳는 생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는 다르게 비대립적이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은 기술이나 가격 및 기능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배를 결정하는 중앙계획의 결정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불평등의 범위는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작다. 셋째, 사회주의의 특권 정치엘리트층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특권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계급과 같은 폐쇄성을 지니지 않는다.⁶⁸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불평등과 특권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계급구조 소멸의 결과 소련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표면적으로는 공동소유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에 대한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었으며 그 자체가 고용주인 국가의 피고용인으로 변했다. 사

⁶⁸ 데이비스·스케이스,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구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90).

I
II
III
IV
V
VI

적 소유가 사라진 소련사회에서 계급형성의 조건과 결정요소는 더 이상 소유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경제에 스며든 행정-명령관계였으며, 정책과 법률적 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국가는 이와 같은 행정-명령경제체제에서의 통제를 위한 국가관료층을 필요로 했다. 사회구성원들은 소유관계에 기초한 계급관계가 아니라 생산체제 내의 기능적 전문화에 의해서 위치 지워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주의 계급내부의 분화상태가 형성되었다. 자본주의와 다르게 사회주의에서는 기능의 분화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계급 간의 경제적 갈등을 정치영역으로 변화시킴으로서 비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차이들이 권력이나 특권 그리고 위신상의 각종 불평등의 기반으로 작용했다.⁶⁹

사회주의의 행정-명령계획체제는 복잡한 중앙집중적 관료체제를 형성했고, 관료체제의 각 단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집행할 관료적 지위들을 양산했다. 평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들 자체가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권과 처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관료들은 형식상으로 국가의 대리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소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을 감독할 국가 역시 이들 내부의 인적구성원들로 채워졌다. 사유재산이 사라진 사회주의체제에서 통제권은 곧 특권과 부를 의미했다. 소련의 지배엘리트들은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새로운 독재체제에서 지배엘리트들은 자본주의체제에서보다 더 많은 특권을 향유했으며, 국가예산과 희소가치를 사적으로 유용할

⁶⁹. 위의 책.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⁷⁰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관계는 정치관계로 대체됨으로써 계획경제와 통제체제 속에서 관료체제는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권력이 경제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행정-명령경제의 정점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분배체제를 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사회의 새로운 특권층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체제는 자본가계급의 근절과 동시에 통제를 위한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으며, 밀로반 질라스의 ‘새로운 계급’⁷¹이나 보슬렌스끼의 ‘노멘클라투라’⁷²는 이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새로운 계급은 부르조아지와는 경제적 기초가 달랐지만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의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불평등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엘리트들의 손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한 차별적 특권과 불평등이 일반화되어 있었다.⁷³

초기의 경우 노멘클라투라는 핵심정치엘리트들을 지칭하였으나

⁷⁰-J. Winiecki,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A Property Rights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p. 3.

⁷¹-М. Джилас, *Лицо тоталитаризма* (Москва: Новости, 1992).

⁷²-소련인구의 대략 1.5%에 달했던 노멘클라투라는 “가장 중요한 직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의미로서 소련사회의 특권계급을 의미했다; М.Восленский,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CC. 12~14. 행정-명령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관료적 지위들은 이 직위를 임명에 관계되는 중요 인물들의 추천과 이에 대한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이와 같은 임명과정과 그 결과 형성되는 폐쇄적인 특권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⁷³-R. Sakwa, *Soviet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9), p. 226.

I
II
III
IV
V
VI

이후 산업부분과 농업부분, 교육, 학술부분 등 각 분야의 고위담당자들을 포함하는 소련의 특권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소련사회의 형성에서부터 위계적 조직형태로 시작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사회의 위계적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권력계층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국가소유권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실현시키는 계층이었다. 그와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대다수 구성원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⁷⁴ 사회주의체제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향유했으며, 이에 따른 불평등구조가 소련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 사회주의 인성

외형적으로 산업사회의 특성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관계와 일상생활은 자본주의와는 많은 점에서 상이했다. 자본주의와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은 고유한 특성들을 만들어 냈다.⁷⁵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정

⁷⁴-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С. 73.

⁷⁵-Piotr Sztompka는 사회주의 사회에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문명적인 비적응력(civilizational incompetence)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문명적인 적응력(civilizational competence)과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p. 5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Walder는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신 전통주의(communist neo-traditionalism)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전통사회의 특성(종속, 복종, 특수주의)들을 근대성(자유성, 계약, 보편주의)으로 대체해 나가지만 사회주의체제는 과거의 전통사회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전통주의적 특성들은 전통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속성에 기

치적 독재 및 엄격한 사회통제로 대중적 소외와 아울러 시민사회의 형성을 억제했다. 자유로운 사회관계와 건전한 시민정신의 형성은 제약되었으며, 사회주의 특유의 수동성이 사회를 지배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사회주의사회의 특징적 현상의 원인이었다. 직접적인 주입식 교육(**direct indoctrination**)과 강압적인 전체주의적 통제는 사회주의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에는 기회주의와 맹목적인 동조, 결정 및 책임의 회피가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가부장적 특성과 결부되어 사회주의 주민들의 수동성을 강화시켰다. 일방적이고 주입식인 교육과 강압적인 통제는 사회주의 주민들의 내적인 방어기제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률에 대한 무시, 규칙에 대한 제도적인 회피, 권위에 대한 불신,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은 공적세계에 대한 사회주의 주민들의 내적이고도 사적인 방어기제였다.

사회주의체제에 기반한 다양한 특성들은 고유한 인성형태를 만들어 냈다. 양심, 근면성, 성실, 책임, 신뢰성, 노동에 적합한 기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위험(**risk**)계산 등의 결여는 사회주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특징들이었다. 이 같은 점들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의존(**state-dependent**)’적 특성이 보편화되어있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국가의존 특성은 노동에 대한 경멸 및 기피, 자주성과 위험(**risk**)에 대한 무능력과 회피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 존형 노동자들은 성취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보다 관심을 두며, 안전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 전통주의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A.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1~27.

I
II
III
IV
V
VI

은 개인이 지니는 필요의 충족에 대한 전망보다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서 규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주도형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보상은 국가주도형 노동자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직업이 유용하다는 점과 안전을 보장해주며 미리 고안된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사회집단들에게 이익과 특권을 가져다준다.⁷⁶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2.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은 시장화에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변화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갈등의 구조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체제전환의 방식과 결과는 사회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형성의 구조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체제전환방식의 이해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기 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가장 중요한 비교의 준거는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사회주의사회의 ‘해체’를 통한 체제전환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저발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에 주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과정에서 ‘해체’와 ‘건설’에 따른 상이한 사회적 변화들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사회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나 점진적 체제전환의 경

⁷⁶-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5~46.

우 개발도상국의 초기적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⁷⁷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한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사회주의적 발전과 공업화의 수준도 소련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사회주의적 외피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진행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게 된다. 고도성장과 도시화, 핵가족화, 소비생활의 비약적 발전 등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사회갈등의 특징도 자본주의의 근대화과정의 경험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이룬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근대화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전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특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해체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가 다른 저발전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한다. 구체제에서 형성된 수많은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에서 변화와 새로운 적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세계의 주인인 러시아인

⁷⁷이로 볼 때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과정에서 한국의 1970년대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와 유사한 특성들이 확인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I
II
III
IV
V
VI

들의 일상적 삶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체제전환과정은 사회주의체제에서부터 장기간 형성되어온 구조적 특성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 직후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은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을 온존시켰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필요한 문명적응력들의 형성을 제약했다. 체제전환기라는 특수성은 새로운 몇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추가시켰다. 첫째로 아노미 혹은 가치론적인 혼돈의 확산과 규범, 가치, 확고한 규칙, 삶의 정당한 방식들에 대한 방향감각 상실현상이 발생했다. 과거가 부정되지만 새로운 대체물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졌고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둘째로 새로운 부와 권력, 위신의 획득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등장은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야만적 경쟁체제를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는 이익은 크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이 있다. 셋째, 확고했던 내적 혹은 외적인 사회통제가 일시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찰력과 사법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전체주의적 기원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법체계는 권위를 잠식당했다. 마지막으로 서구화의 추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왔다. 국경이 열리자 서구의 가치 있는 생산물들보다 포르노와 마약, 야만성과 신비주의, 조직범죄와 일탈적인 삶의 방식들을 포함하는 저질의 소비자 대중문화가 포스트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사회로 밀려 들어왔다. 장기간의 사회주의가 결과한 특성들이 포스트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 이후 혼돈된 상황의 부수적인 결과들은 포스트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력’을 저해하면

서 ‘비적응력’들을 온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체제전환의 초기적 과정에 있어 구체제의 특성들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기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급진적 체제전환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제는 급속히 약화되지만 구체제의 특성인 독점화는 약화되지 않으며, 이익집단들에 의한 조합주의적 통제가 나타난다. 이들에 의한 자원분배체제의 통제는 독점화된 부분에 대한 자원의 특혜적 분배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소외현상을 초래한다. 또한 급진적 사유화는 구체제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은 경제의 지하경제화 및 범죄화라는 지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한다. 자율적인 경제주체들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던 사유화과정에서 구지배세력들의 개입은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제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기 사회주의국가들에 특징적인 사회적 측면이 나타난다. 체제전환기의 경제체제의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약화와 실업을 야기하며, 범죄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새로운 사회분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던 구사회주의체제의 사회구조가 시장화에 따라 불평등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구사회의 해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I

II

III

IV

V

VI

3. 북한의 사회갈등구조

가. 당국과 시장 간 갈등구조

사회주의 말기의 구조적 위기 심화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중요한 시사점은 이해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체를 수반하는 급진적 체제전환과 시장화 사례의 경우 사회갈등의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발전정도가 높고 사회주의체제 간의 상호의존성이 클수록 이를 해체하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점진적 체제전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수반하는 경우 사회갈등은 비교적 완만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시장체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발전된 국가에 해당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완결성의 정도, 경제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정비정도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높았다. 그리고 소유권제도의 국유화 수준도 매우 높았다.⁷⁸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결과물들은 시장경제체제와 조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원인의 제공한 비효율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했으며, 이에 수반하여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 해체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체제가 발달되어 있을수록 체제전환과정에서 해

⁷⁸ 사회주의체제의 발달, 경제의 중앙집중화, 소유권의 형태, 사회주의복지체제 등의 발달정도와 경제체제변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p. 56~57 참조.

체비용이 그만큼 더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는 연금생활자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왔으며, 이는 1990년대 좌파그룹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중진국 수준의 공업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경우도 사회주의체제 사회갈등의 특성을 상당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장기간의 구조적 경제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주의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부문, 사회주의요소와 시장요소의 혼재, 그리고 생존경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말기에 나타났던 와해기적 과정(erosion period)⁷⁹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갈등 역시 이와 같은 배경적 조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 역시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화의 지향성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관련된 상당한 ‘해체비용’의 지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요소의 부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의 중앙집중화된 경제체제는 해체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경

79. 탈사회주의 체제변화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되어 가는 과정인 와해기(erosion)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공식적인 전환하는 체제전환기(transition)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와해기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시작되며, 체제전환기는 위로부터 그리고 시장경제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화 등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작된다. 와해기에 국가는 사적인 부문을 억제하거나 일시적인 양보를 할뿐이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에 국가는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며, 이와 같은 조치들은 사적소유권을 보장한다. 북한의 경우 체제와해기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배집단차원에서 위기의식을 인지하여 해결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처방은 체제내적인 지향성을 지니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가 진행되면 새로운 사적영역들이 창출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제1경제’에 속한 사람들이 ‘제2경제’에 참여시키는 자극으로 작용한다.

I
II
III
IV
V
VI

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북한에서는 중앙의 배급체제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생적인 경제적 자구노력과 개인들간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북한이 시도했던 2009년의 화폐개혁은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식경제와 빠르게 성장한 비공식 경제구조 간의 갈등, 국가와 시장 간의 갈등, 그리고 당국과 일반주민 간의 갈등의 지형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⁸⁰

북한 화폐개혁의 의도는 여러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해 북한은 그 동안 일부 시장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다.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은 지하경제와 생존경제가 혼합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계획경제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며 확장해 왔고, 북한주민의 생활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북한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경우 경제적 통제력 약화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을 우려, 시장을 무력화하고 공식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엘리트와 일반주민 간 갈등구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간의 갈등과 당국과 주민 간의 갈등관계의 중심에는 ‘간부’로 불리우는 북한의 엘리트층이 존재한다. 시장체제와 달리 계획경제에서는 자원의 분배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이를

⁸⁰ 조한범, “북한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Online Series CO 10-03, 2010.2.4).

담당하는 간부들은 결합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갈등은 간부와 비간부(일반주민) 간에 형성된다. 북한에서 간부는 일반주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간부들이 특권을 향유하는 한편 자신들이 지닌 권한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심화 과정 및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 관료들은 부패가 확산되며 이를 통해 불법적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 의한 자산축적은 공적자산을 비합법적으로 유용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시장유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⁸¹ 경제위기의 심화와 시장의 활성화라는 상황적 변화과정을 북한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자산축적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간부층은 상층의 엘리트에 비해 일반주민과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국가나 지도자, 또는 최고위층의 간부보다는 일상에서 접하는 중간간부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²

간부들은 북한경제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한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간부-비간부 갈등구조는 관성을 유지한다. 이는 혁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대체로 구체제의 기득권층들이 신흥부유층 및 기업가 형성에 있어서 친화력을 가지는 한편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기술관료적 연속성론(technocratic continuity thesis)과 권력변환론(power conversion thesis)은 사회주의와 체제전환기의 엘리트 간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논의이다. ‘기술관료

⁸¹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균열과 갈등구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 160~172.

⁸²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pp. 124~133.

I
II
III
IV
V
VI

적 연속성론(technocratic continuity thesis)'은 사회주의체제가 전문적인 기술관료집단을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한다.⁸³ 이 실용적인 새로운 엘리트들은 이행기에도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권력변환론(power conversion thesis)'은 새로운 엘리트가 구엘리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사회주의 시기에 축적된 권력은 시장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자본이 경제적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⁸⁴ 따라서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기반으로 국유재산의 획득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연줄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된 상황을 이용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통제력을 유사 혹은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전환시킨다.⁸⁵

다. 엘리트 간 및 일반주민 간 갈등구조

계획경제의 모순과 장기간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의 공식적 가치체계를 약화시키며 북한에서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를 양성하는 토양으로 작용한다.⁸⁶ 계획경제 내에서 권력과 결합되어 있던 경제적 권력은 새로운 경제관계의 형성에 따라 분리되며, 결국 돈이 모든 것

⁸³-Erzsebet Szalai, *Gazdsa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⁸⁴-Jadwiga Staniszkis,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⁸⁵-Akos Rona-Ta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AJS)*, Vol. 100, No. 1 (1994), pp. 41~47.

⁸⁶-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7), pp. 285~295;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09~113.

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비공식 생존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계급·계층구조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즉 새로운 상인계층과 이에 편입하지 못한 층으로 나뉘게 된다. 북한사회갈등의 구조는 빈부격차라는 자본주의형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위기의 지속은 간부-비간부 갈등 구조와 함께 몇몇 새로운 경향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엘리트 내의 계층분화와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의 위기는 전통적인 기득권층의 약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구조 및 대외무역구조와 관련된 엘리트층의 급속한 성장을 의미한다. 당과 내각, 군의 전통적 엘리트들이 특권의 정체 내지는 축소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대남관계 및 무역과 관계하는 엘리트들은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부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남 사업 및 무역분야의 부서 및 당·군부 강경파 간의 갈등설은 이와 같은 구조를 기초로 한 것이다.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전통적인 권력엘리트와 배급 및 자원분배를 담당하는 실무 수준의 중간간부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분배할 자원의 부족은 권력엘리트와 중간간부층 권한의 약화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권력엘리트의 생활수준 하락과 권위 상실, 그리고 중간간부층의 붕괴⁸⁷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특권을 바탕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⁸⁷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pp. 188~190.

I
II
III
IV
V
VI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구조는 새로운 보상구조(a theory of structural compensation)⁸⁸를 만든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엘리트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계획경제의 위기는 간부뿐만 아니라 북한 계급·계층구조 전반의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와 계급·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즉 계획경제에 기반한 전통적 계급·계층구조가 전반적으로 와해되는 반면 시장과 금권에 기초한 새로운 계급·계층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경제위기의 심화와 시장화의 진전은 일반주민들에게 과거와 다른 사적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머물던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도·소매망의 발달과 상업유통 및 운수, 가내수공업과 국유기업설비 임차생산, 그리고 사금융 발달과 주택거래 등 다양한 차원으로 범위가 확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불균형 심화와 신흥유산계급 형성을 포함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⁸⁹ 이는 북한사회에 새로운 불평등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며, 주민들 간 사회갈등의 지형으로 작용하게 된다.

계획경제의 위기는 전통적인 계급·계층구조를 지탱할 물질 기초의 와해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 집단의 생활수준 하락과 권위 상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간부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불평등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질서와 배치

⁸⁸- Victor Nee,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ASR)*, Vol. 54, No. 5 (October 1989); Victor Nee,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ASR)*, Vol. 56, No. 3 (June 1991).

⁸⁹-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균열과 갈등구조," pp. 172~208.

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새로운 상업 활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포함한 전통적 사회주의 중간층의 와해가 두드러지며, 궁핍화의 경향이 발생한다.⁹⁰ 북한의 중간층은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권위의 하락과 아울러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하며, 부업 또는 불법적 수입의 획득 등 다양한 형태의 생존형 적응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빈부 갈등구조

최근 북한의 사회갈등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공식경제의 해체와 시장화 요소의 확대에 따라 점차 빈부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구조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평등주의의 약화와 아울러 빈부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축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약육강식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체제전환 그리고 시장화 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와 경제영역에서의 시장화, 그리고 다원주의 문화의 형성 등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달성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다. 동시에 보다 본질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과제는 새로운 체제의 주역이 될 새로운 행위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이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던 구사회주의의 계급·계층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계급구조의 전반적인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시장화의 성공

⁹⁰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pp. 147~180.

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금기시 되던 사적영리활동에 기초한 새로운 기업가층의 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자층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주의와 다른 새로운 사회분화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사회주의체제의 안정된 계급·계층구조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북한이 취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시장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야기했다. 특히 임금과 물가의 현실화, 그리고 노동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의 7·1 조치는 사적경제영역의 확대와 빈부격차 확대의 가능성을 높였다. 인센티브제에 따른 소득격차는 자본주의체제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시장화의 추이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1 조치 이외에 북한 내에서는 비공식적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2009년 시도된 화폐개혁에서는 시장화의 양상이 통제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북한당국의 우려가 배경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따르는 변화 과정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과 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다. 가장 특징적 변화는 과거에는 제한적이거나 금기시되었던 개인 경제활동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와 배급체제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개인들의 생존경제 차원에서의 지구책 모색이 개인 소상공업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북한은 농민시장을 확대한 종합시장제를 실시했으며,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⁹¹ 북한당국이 취한 것으로 알려

⁹¹ 『연합뉴스』, 2003년 6월 10일.

진 시장관련 조치는 농민시장에서 농산물 이외에 공산품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 소상공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상공업은 주로 가족단위 혹은 합작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⁹² 소상공업과 달리 권력과의 유착을 토대로 한 재벌형 신흥부유층의 등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자산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거나, 천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를 통한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계급·계층구조의 등장은 빈부격차라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비교적 평등체제를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계급·계층구조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불평등의 확대 및 구조화 경향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북한당국은 개인 소유의 주택, 창고, 차고, 컨테이너 등이 차지하는 땅에 대해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개인소유의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다른 이들은 부의 축적에 있어서 정당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잠재적 갈등구조를 형성한다.

현재 북한에서 목도할 수 있는 시장화 현상과 사적경제 영역의 확대 등은 일정한 제약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경쟁

⁹²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기본생필품에서 점차 다양화하면서 고급화 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주요 품목으로 사탕과 의류가 있으며, 사탕은 전체 50%, 의류는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강택, 『북한 경제의 시장화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22.

I
II
III
IV
V
VI

체제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노동시장 등이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계획경제와 배급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통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적경제 영역들이 제도적 불완전성을 권력관계와의 유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적영역의 확대와 이로 인한 자본축적,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형성과정은 북한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계획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보다는 일종의 기생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족한 공식 배급품목들을 사적시장으로 빼돌려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과정에서 관료와 ‘시장’ 간의 이해관계가 관철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기 및 체제전환기에 상당기간 존속하며, 새로운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료와 엘리트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주의 와해기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본격적인 체제전환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대추구 행위와 부패, 불법적 경제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새로운 체제에 맞게 재빠르게 변화시킬 것 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도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체제의 해체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제의 탈중앙화는 국가의 통제능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경제화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국가의 통제능력 약화와 지하경제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관료엘리트들의 비제도적 간섭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체제전환의 과정은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복지체제의 와해, 노동시장의 재편과정을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하향이동과 새로운 빈부격차를 야기한다. 구체제에서 축적한 ‘정치·경제·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특권층과 이들과의 결탁을 통한 새로운 사적영역들은 빠른 속도로 유산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층분해되는 대중적인 부분과 새로운 상층부 간의 빈부격차는 결과적으로 긴장상태를 야기하며, 사회주의체제에서 형성된 자질 있는 노동자들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새로운 빈부격차는 평등체제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에게 생소한 것임과 동시에 부의 축적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갈등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IV. 북한의 경제위기와 사회갈등 실태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1. 경제위기와 불평등 수탈 구조의 형성

북한의 사회갈등은 1990년대 경제위기가 출발점이자 핵심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가 오늘날의 사회갈등을 초래한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경제위기 이전에도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 이전에는 배급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활하는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구조라는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했다. 국가는 주민들에 대한 생계 보장의 책임을 방기하고, 주민들에 대해 식량을 비롯해 생계문제를 자력갱생하도록 강요했다. 국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국가 전체적으로 불평등 수탈 구조를 만들어갔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여지를 증대시켰다.

가.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국민경제에 대한 일종의 이중구조화 전략이다. 기본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중구조이고, 한편으로는 특수경제(당경제, 군경제)와 일반경제(내각경제, 주민경제)의 이중구조이며, 또 한편으로는 군수공업을 포함한 중공업과 경공업의 이중구조이다. 다만 이중경제구조는 개념적 차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중경제구조라 해도 두 부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I
II
III
IV
V
VI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이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상당 정도 존재한다. 특히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그러하다.

이중구조화 전략은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정부의 대응양식이다. 북한 정부는 우선순위체계에 입각해서 자원배분을 재조정 하되 국민경제 전체, 경제의 모든 부문을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하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국가재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위기적 상황에서 북한정부가 선택한 생존전략인 셈이다.

국가는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이들에 대해 자력갱생에 의한 생존 해결을 요구했고,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을 묵인했다. 자원부족으로 인해 모든 국민을 껴안고 갈 수 없게 되자 국가가 책임지는 층(엘리트층)과 국가가 방기하는 층(일반 주민)을 구분했다.

7·1 조치는 이러한 이중구조화 전략의 공식화라는 성격을 가진다. 7·1 조치 이전에도 계획경제 시스템의 약화 및 암시장의 창궐 등으로 이러한 이중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이는 시장이 비공식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중구조화 전략은 공식화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이중경제구조화 전략, 즉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차별, 특수경제와 일반경제의 차별이 1990년대 경제위기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위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경제위기 이전에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상대적 빈곤에 절대적 빈곤이 더해진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절대적 빈곤은 ‘아사’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해지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계획경제의 와해, 국가의 재정위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진전으로 축적기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했다. 축적의 원천은 계획경제 영역에서 시장경제 영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일반경제에 대한 특수경제의 수탈 현상은 확대, 심화되었는데 대외무역이 핵심 고리로 등장했다. 시장에서 발생한 잉여에 대해 국가가 각종 조세, 준조세를 통해 주민들을 수탈하는 새로운 수탈 구조가 형성, 확대되었다.

아울러 권력과 금력의 결합, 관료들의 부패 현상 심화 등 당군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심화되었다. 2009년 11월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은 국가가 주민들에 대해 보유 화폐(내화, 외화)를 강제적으로 몰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약탈국가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약탈국가화 현상의 심화가 체제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계획경제의 기반 침식, 국가시스템의 기능 저하, 나아가 민심 이반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수탈 구조는 사회갈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나. 식량분배의 우선순위체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체계에서 식량분배의 우선순위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악화의 영향은 모든 주민들에 대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계층별로 상이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특히 경제위기 이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체계가 고도화되었다. 물론 식량분배의 우선순위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이하 서술할 내용은 하나의 예시 차원에서 소개한다.⁹³

⁹³ 이하 식량 배급 우선순위체계에 대한 서술은 법률희님, “북한 식량 상황과

I
II
III
IV
V
VI

식량 분배에서 1순위는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 중심구역 거주 주민으로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순위는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작전부, 호위사령부 등이다. 1, 2순위에 해당하는 인구층은 250만 명으로 이들은 배급시스템에서 핵심인구층을 형성하고, 전체 인구의 약 12%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에게 모두 배급이 정상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연도의 식량사정에 의존한다.

3순위는 군수공장 종사자 및 그 가족(약 250만 명), 특급기업소 종사자 및 그 가족(150만 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업의 가동상황 등에 따라 배급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순위는 일반 노동자, 교사, 의사, 서비스직 종사자 600만 명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인구층은 실제 배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한편 농민층은 현금분배와 현물분배를 받기 때문에 국가 배급대상에 속하지 않는데 농민인구는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다. 일반경제에 대한 특수경제의 수탈

국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체계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경제, 군경제 등 특수경제의 상대적 확대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는 인민경제(내각경제)와 특수경제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특수경제가 내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수령 직할의 독자적인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수경제는 당경제와 군경제로 성립되고, 이 가운데 군경제는 순수 군경제와 군수경제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경제는

인도적 위기,"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좋은벗들 주최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집, 2006)에 주로 의존.

독립적으로 농장, 공장, 기업소, 광산, 그리고 무역회사, 심지어는 은행까지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외화난이 심각해지면서 무역회사의 역할은 확대되었는데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출 원천은 대부분 특수기관 소속 무역회사에게 흡수되었다.

당경제의 경우 1974년에 대성총국(대성무역총회사), 당39호실이 출현했고 1978년에는 대성은행이 설립되었다.⁹⁴ 39호실이라는 당 지도부서와 대성총국이라는 생산 및 무역기관, 대성은행이라는 대외결제은행의 결합으로 경제연합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당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이후 38호실 등 당 경제부서들이 신설되면서 당경제는 외연을 확대해갔다.

또한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당경제 소속 무역회사들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예컨대 대성총국의 경우 총국 차원의 무역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하 국(局) 차원에서도 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내각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당의 기관들도 국가재정위기 속에서 일정 정도 자력갱생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당경제 운영에서 외화벌이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기존의 내각 소속 광산, 공장, 농장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것들을 자신의 산하로 흡수(찬탈)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다.

군경제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제2경제위원회가 설립되어 내각으로부터 독립 운영되었다.⁹⁵ 그동안 정무원(내각)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군수품 생산 관련 부서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이로써 자체적으로 군수품을 계획, 생산, 관리,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⁹⁴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⁹⁵ 위의 글.

I
II
III
IV
V
VI

했는데 현재는 무기 수출입까지 총괄하고 있다. 이는 내각의 통제에서 벗어나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또한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군경제 소속 무역회사들도 잇따라 설립되었다. 예컨대 인민무력부의 경우 총참모부 차원의 무역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하 각 군단 차원에서도 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내각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군의 기관들도 국가 재정위기 속에서 일정 정도 자력갱생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군경제 운영에서도 외화벌이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도 기존의 내각 소속 광산, 공장, 농장 등을 자신의 산하로 흡수(찬탈)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다.⁹⁶

특히 고난의 행군 기간에는 무역회사의 난립 등으로 대외무역이 매우 무질서해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역회사의 권한이 확대되는 사실상 무역의 분권화가 진전되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상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경제와 일반경제가 국민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1989년과 1999년의 10년 동안에 전체 계획경제의 규모는 500억 달러에서 223억 달러로 무려 55%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일반경제의 규모는 이 기간에 64%나 감소한 반면 특수경제의 규모는 26% 감소에 그쳤는데, 이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경제가 77%에서 62%로 감소한 반면

⁹⁶ “사회탄광(내각경제 내 탄광)이라도 탄밭이 좋으면 인민무력부가 먹어버린다. 군 중시사상이고 선군정치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탄광이 하나 있다고 하자. 이것은 현재 석탄공업부 소속의 탄광이다. 그런데 탄밭이 좋고 석탄 칼로리가 높다고 하면 이걸 군부가 자기 특성을 가지고 권력을 내세워서 노무자들까지 통제로 군부대 노무자화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흡수해 버리고 만다. 석탄공업성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탈북자 K2 씨)

특수경제는 23%에서 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1 경제위기 이후 특수·일반경제의 비중 변화

구분	1989년(A)	1999년(B)	B / A
전체 계획경제	500억 달러 (100%)	223억 달러 (100%)	0.45
특수경제 (당경제 + 군경제)	115억 달러 (23%)	85억 달러 (38%)	0.74
일반경제 (암시장 등 지하경제 제외)	385억 달러 (77%)	138억 달러 (62%)	0.36

출처: 성채기 외,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 29를 약간 수정.

2000년대에 들어서도 특수경제의 상대적 확대와 일반경제의 상대적 축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2년경부터 국방공업 우선의 자원배분체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에 특수경제 소속, 특히 군경제 소속 무역회사의 활동이 일반경제 소속 무역회사의 활동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의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무역회사의 활동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요컨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일반경제에 대한 특수경제의 약탈 현상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확대, 심화되었는데 여기서는 대외무역이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라. 일반주민에 대한 국가의 수탈

북한정부는 7·1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및 계획경제부문이 수취해가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시장경제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재정수입으로 흡수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다.

●표 IV-2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 시장과 연계된 조세의 제 유형

구분	조세의 직접적인 납부자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	조세와 시장의 연계형태
공장·기업소의 국가기업이익금	공장·기업소	공장·기업소 및 소비자	번 수입(계획 외 생산 및 유통)
종합시장의 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	종합시장 매대 상인	상인 및 개인 수공업자, 소비자	종합시장 내 상품 판매
서비스업체 국가납부금	수매상점, 협의제식당, 당구장, 가라오케 등 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 및 소비자	일반주민 대상 서비스 판매
무역회사 수익금	무역회사	무역회사, 기관·기업소, 국내 유통업체, 소비자	수출품의 국내 매입, 수입품의 국내 판매
토지사용료 및 부동산사용료	기관·기업소, 협동단체, 개인	기관·기업소, 협동단체, 개인	토지, 주택, 건물 등 국토를 사용하는 제반 시장경제 활동

출처: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서울: 한울, 2010).

다만 이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흡수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경제, 군경제

등 특수경제의 화폐수입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무역회사의 시장경제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잉여는 일반경제보다 특수경제에 더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은 현재 특수경제(당경제, 군경제)와 일반경제(내각경제, 주민경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수입은 기본적으로 내각경제에만 속하게 되어 있다. 당경제, 군경제는 국가예산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 군, 내각의 경제는 각각 시장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자신들 부문의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의 유지, 소속 구성원들의 생계 유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형국”이다. 여기서는 7·1 조치 이후, 나아가 종합시장 허용 이후 개편 및 신설된 각종 국가납부금 및 사용료 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정부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해 재정수입의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표 IV-2> 참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창출한 잉여의 수탈에 다름 아니다. 물론 앞에서 보았던 각종 사용료, 국가납부금은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수탈’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하에서 살펴볼 각종 준조세까지 시야에 넣으면 ‘수탈’이라는 표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세외부담’이다. 세외부담은 세대부담과 대비되는 것이다. 각 세대가 집세,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용료가 세대부담이라면, 그 이외에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국가 혹은 지방 차원에서 바쳐야 하는 준조세를 세외부담이라 일컫는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각종 현물, 현금을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상부

I
II
III
IV
V
VI

에 바쳐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 발전소 건설 지원, 도로 보수 지원, 인민군대 지원 등의 명목으로 중앙 혹은 지방 차원에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잡부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국가는 주민들에 대해 돼지고기, 장갑, 세면도구, 도시락 등 현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아울러 4·15 행사와 같은 국가적 행사나 문화주택 건설과 같은 중요 건설사업 등에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이러한 행사나 건설사업에 나가지 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별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인민반별로 외화별이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경우 마른 고사리, 토끼 가죽, 금 등을 국가에 바쳐야 하는데 현물로 바치지 못하면 현금을 바쳐야 한다. 평양 출신인 탈북자 C1씨⁹⁷의 경우, 직장에서 아예 월급의 10%를 외화별이 명목으로 공제했다고 한다.

세외부담은 일반 주민들의 삶, 특히 하층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필자의 탈북자 설문조사결과⁹⁸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124명(81.1%)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는 대답도 28명(18.3%)이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99.4%가 세외부담이 계속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세외부담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는 명

⁹⁷ 이 글에서 인용하는 탈북자 증언은 필자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이다. 인터뷰는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⁹⁸ 탈북자 2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확하지 않다. 한편 이러한 세외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응답이 35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 수준(24명, 18.2%), 10% 수준(23명, 18.2%)이라는 응답이었다. 소득의 50% 수준이라는 응답도 14명(10.6%)으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표 IV-3 세외부담의 지속적 증가 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매우 그렇다	124	81.1
조금 그렇다	28	18.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0.7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합계	153	100.0

표 IV-4 세외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응답자수(명)	0	23	24	35	13	14	2	6	6	2	7	132
비율(%)	0	17.4	18.2	26.5	9.9	10.6	1.5	4.6	4.6	1.5	5.3	100.0

세외부담 외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보호세(Protection Rackets)⁹⁹’ 명목의 뇌물 징수이다. 즉 7·1 조치 이후, 특히 종합시장 개설 이후

⁹⁹ 보호세 명목의 뇌물 공여, 개인재산의 ‘합법적’ 몰수라는 개념은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서울: 한울, 2008) 참조.

시장경제활동이 일부 합법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시장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거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이다. 게다가 시장에 대한 단속, 통제는 ‘비사회주의 척결’을 내세우며 기존 제도를 무시하는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상행위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신들을 ‘불법’ 또는 ‘비사회주의’이라는 명목하에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 기관(중앙당,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호위사령부, 검찰소 등)’ 사람들에게 뇌물을 공여해야만 상행위를 안정적으로 행할 수 있다. 특히 돈주들은 대부분 ‘불법’ 또는 ‘비사회주의’ 활동과 깊이 관여되기 있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뇌물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특성이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재산의 ‘합법적 몰수’이다. 예컨대 각종 검열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부정 축재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상에 대한 처벌은 상당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몰수를 수반한다. 종합시장의 매대 상인에서부터 상점, 식당 등에 대한 개인투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개인투자가의 경우, 몰수당한 재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세외부담, 보호세 명목의 뇌물, 개인재산의 합법적 몰수는 앞에서 보았던 각종 사용료, 국가납부금보다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 중앙 혹은 중간관리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더 크다. 또한 이들을 통해 국가가 수탈한 잉여는 모두 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합법적으로 중간관리기관에 귀속되겠지만 또 일부는 불법적으로 착복, 유용되는 등 비공식적·사적 영역으로 유출된다. 그럼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준조세와 다름없고, 따라서 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2.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 시장화의 진전과 계급·계층구조의 재편

시장화의 진전은 기존의 사회계층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북한의 경우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특히 공식적인 직업·신분과 시장을 매개로 한 실제의 생계수단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화는 사회갈등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행위자의 행태리는 관점에서 시장화의 일반적인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급자(판매자) 및 수요자(구매자)로 시장에 등장한다. 최초에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은 단순 물물교환일 수 있으나 점차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으로 발전한다. 이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목적은 초기에는 과부족 물자의 교환 등 비화폐적 동기였으나 점차 이윤획득 등 화폐적 동기로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재 시장이 형성된다. 이 때 지리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를 중개하는 상인이 등장한다. 이 상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상일 수도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는 점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판매자)는 상품을 직접 생산했던 여타의 방법으로 취득했던 소생산자 등 상품의 원 소유자이거나, 원 소유자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은 상인이다.

상인은 지역 내 상업(근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역 간 상업(원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거래규모가 작고, 후자는 거래규모가 크다.

한편 시장의 발달은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즉 안정적인 판

I
II
III
IV
V
VI

로의 확보, 나아가 판로의 확대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확대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상품 생산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분업의 발생, 확대 현상도 나타난다. 즉 소상품 생산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전문적인 품목에 생산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자들간의 연계도 이루어지면서 생산재 시장이 형성, 발전하게 된다.

시장의 발달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인층의 형성, 확대 및 분화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분화이다. 즉 초기에는 한 사람이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도매상과 소매상이 분리된다. 또한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상인과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인의 분화도 나타난다. 아울러 초기에는 상인이 창고 업무와 운수 업무를 겸하게 되나 점차 창고업과 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된다. 즉 상업에서 창고업과 운수업이 분리된다.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신규로 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기존에 상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초기에는 시장에서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일부는 전문적인 금융업(사채 및 고리대금업)자로 전화한다. 이른바 금융시장의 출현이다.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게 되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하게 된다.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상인이 자본가로 전화하게 되고, 반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도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출현인 것이다.

나. 빈익빈 현상¹⁰⁰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장에서 부의 집중·집적 및 이에 따른 초보적인 독과점 현상, 나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시장에 대한 단속, 통제 강화를 계기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사를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나오게 마련이다. 특히 자기 자본이 없어 빚을 내어 장사를 시작했으나 실패한 사람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7·1 조치 이후 새롭게 상행위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 주민들은 준조세의 성격이 강한 이른바 세외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행위로 인한 수익을 국가 및 중간 관리층에 수탈당하다 보니 생계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의 본격화는 주민들의 상행위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뇌물의 증가는 상행위 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사회의 최하층, 특히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꽃제비로 전락하거나 범죄의 길로 나서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빈익빈 현상은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탈북자 본인이 개인수공업이나 개인상업, 각종 부업

¹⁰⁰ 이하의 서술은 양문수, “시장 역제기 북한의 시장화: 실패와 함의(2007-2009),” (서울대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엄 발표논문, 2010)에서 가져왔다.

I
II
III
IV
V
VI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은 대체로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IV-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현금소득이 2007년 이후 많이 줄었다는 응답이 26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득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24명, 28.2%)이었고, 그 뒤를 이어 조금 줄었다는 응답(16명, 18.8%)이었다. 즉, 많이 줄었든, 적게 줄었든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표 IV-5 2007년 이후 본인의 현금 소득 변화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많이 줄었다	26	30.6
조금 줄었다	16	18.8
변화 없다	24	28.2
조금 늘었다	10	11.8
많이 늘었다	9	10.6
합계	85	100.0

●표 IV-6 2007년 이후 개인의 현금 소득 감소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	48	26.0
물품 판매자 수 증가, 구매자 수 정체	33	17.8
물가상승에 따라 구매자 수 감소	35	18.9
장사 밀천의 감소	42	22.7
세외부담의 지속적 증가	27	14.6
합계	185	100.0

* 주: 복수 응답

이러한 현금수입 감소의 이유는 다소 복합적이다. <표 IV-6>에도 나타나 있듯이 수입 감소의 이유로 시장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응답(복수응답 가능)이 48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사 밀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응답(42명, 22.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물품값이 오름에 따라 구매자 수가 감소했다는 응답(35명, 18.9%), 그리고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늘었으나 사려는 사람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응답(33명, 17.8%)이었다. 세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7명(14.6%)으로 가장 적었다.¹⁰¹

다.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와 부익부 현상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장에서 초보적이거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은 독과점 현상을 확대, 심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에 따라 돈 있는 사람이 더욱 돈을 잘 버는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었다. 물론 부익부 현상은 빈익빈 현상과 독립적이지 않다. 오히려 빈익빈의 토대 위에서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마당에서 매대를 가지고 장사하다 망한 사람이 종종 나온다. 망했으니까 매대를 팔아야 한다. 이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이 매대를 사들인다. 나도 매대를 사서 들어갔는데 2007년에 매대를 살 때 55만원을 주었다. 2003년에 국가가 배정해 줄 때는 2만원 하던 것이었다. 불과 4년 만에 3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매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번다.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번다. 물론 개인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다. 주

¹⁰¹ 이 설문 문항의 경우는 응답의 현상들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I
II
III
IV
V
VI

로 가족, 친척의 이름을 빌린다. 집도 마찬가지로이다. 집을 사두기만 하면 가격이 다 올라간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번다.” (탈북자 K1씨)

이러한 독과점화 및 부익부 현상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써 전화의 존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전화를 매개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벌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업에 대한 노하우를 체득한 사람들이 선구적으로 전화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을 피하는 방편으로 전화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집전화의 설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¹⁰²되므로 전화를 설치할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돈을 더 벌게 되는, 즉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2007년부터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전화를 놓기 시작했다. 장사 이력이 생긴 상인들이 전화를 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 강원도, 함경북도, 평양 등 전국각지의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A지역은 1,800원이고 B지역은 1,000원이면, 이제는 전화를 통해 두 지역간의 가격 차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B지역은 쌀을 보름, 또는 한 달을 보관하고 있다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쌀을 사려고 오면 쌀 가격을 올린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쌀 가격의 차이가 50원~100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 전화를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나다. 못해도 200~300 달러는 한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모은 상인들만이 집전화를 설치할 수 있었다.” (탈북자 D1씨)
“시장에 대한 시간제한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인들은 집전화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각 시, 군의 도매꾼들은 해산시장 인

¹⁰² 전화 설치비용은 체신소로부터 본인의 집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청진의 경우, 대개 북한 돈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한다 (2008년 기준)고 탈북자 K2씨는 전하고 있다.

근에 사는 해당 물품 판매원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도매꾼이 요구하는 물건을 몰랐으나, 이후 요구 물건을 확보해 주면서 자기 손님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후 이러한 양상이 또 바뀌게 되었다. 도매꾼들이 직접 오지 않고, 버스 운전수 또는 전문 달리기꾼과 연계하여 해산시장의 A씨에게 가라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물건을 쪽지에 써서 전해주게 되었다. 그리고 판매원에게 전화해서 B씨에게 물건을 부탁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판매원은 전화를 받았으므로 해당사람이 쪽지를 가져오면 물건을 전해주었다.¹⁰³ 이때부터 외상문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짐을 먼저 보내고 다음번에 돈을 받으면서 다음 물건을 또 전해주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0명의 판매원에게 오는 도매꾼이 1명의 판매원에게 물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해산 시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富)를 얻게 되었다.” (탈북자 K3씨)

“시간제한, 품목단속을 하면서 돈이 있고, 전화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장 판매원들이 재편되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되어 갔다. 장마당 근처에 살고 전화도 있는 사람들은 시간제한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는 시간에 구매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판매할 수 있었다. 반면, 집이 먼 사람들은 그 시간에만 나와서 장사해야 하므로 도매는 하지 못하고 소매만 하게 되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밀천이 바닥나고 결국은 장마당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장마당이 독점화된 기본 원인이다.” (탈북자 K3씨)

I

II

III

IV

V

VI

¹⁰³. 평남 평성 출신의 탈북자 K4씨도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라.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

권력기관의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단속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즉 시장에 대한 단속은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단속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화의 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다. 물론 권력기관의 사람들은 각종 뇌물의 수수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도 하지만 단속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초법적 지위를 이용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다.

“각 지역별로 전쟁예비물자로 관리하는 휘발유가 있다. 이 휘발유를 보안서, 검찰 등 법기관 사람들이 몰래 팔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같은 곳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온다. 그러면 각 지역의 법기관 사람들은 그 휘발유를 채우기 위해 우리 같은 휘발유 장사꾼들에 대해 돌아가면서 단속을 친다. 그래서 우리 휘발유를 빼앗아서 몽땅 거기에 채워놓는다.” (탈북자 S1씨)

“법기관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때 장마당에서 쌀장사를 강력하게 단속한 적이 있다. 그 때 법기관 사람들이 단속을 하기 직전에 쌀을 많이 사들였다. 그랬다가 쌀값이 갑자기 올라가니 그걸 풀어놓아 돈을 많이 벌었다.” (탈북자 K5씨)

“큰 돈주들은 모두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장사를 한다. 그리고 단속을 할수록 돈주들은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이들은 단속을 더 선호한다. 통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통제가 심해질수록 공급자는 줄어들고 결국 자신만 물건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물건 단가를 높일 수 있고 결국 단속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식량이 대표적이다. 통제를 시작하면 쌀 값이

대폭 오른다. 그래서 통제한다고 할 때 쌀 장사꾼들이 가장 좋아한다.” (탈북자 K2씨)

권력기관 사람들이 단속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우월적이고 유리한 지위로 변화시키는 또 다른 사례는 전화가 제공하고 있다. 즉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외전화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가해 놓고 권력기관 사람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시외전화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독과점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는 2007년 말부터 집전화 설치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여느 장사꾼에 비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돈이 몰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규정상에 타도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업상 집에 와서도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 즉 집에서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타도로 전화를 할 수 있다. 집에서 전화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 즉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장사를 잘 했다.” (탈북자 K3씨)

“2008년 4월, 5월부터 시외전화(빛섬유 전화)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외전화를 할 수 있었다. 기업소나 기관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집에서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할 수 있었다.” (탈북자 L1씨)

결국 단속의 본격화로 인해 돈과 권력의 결합은 확고하게 되었다. 돈주들도 권력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I
II
III
IV
V
VI

“대도시에서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회수당한 물건을 되찾지 못해서 한번의 단속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다. 법기관과 결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을 당하면 타격이 상당하다. 아예 일어나지 못한다. 큰 빚을 지고 법적으로 집까지 빼앗기는 등 큰 장사하고 망한 사람들의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하다. 그러니까 한 두번 망한 이후에는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 법기관에 있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마음 놓고 장사를 한다.” (탈북자 K4씨)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세관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기관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큰 장사를 하기 어렵다. 절대 힘들다. 보통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법기관의 중책에 잘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 합영을 한 경우이다. 그렇지 않고 권력 없이 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탈북자 J1씨)

“권력 없이 장사하기 어렵다. 알짜배기 장사인 돈 장사는 다 법관 또는 간부들이다. 이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아내 또는 친척 형제들이 장사하는 것이다.” (탈북자 K6씨)

“요즈음의 장사는 권력과 돈이 동반된 것이다. 권력 없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돈과 권력이 더욱 결탁된다.” (탈북자 K3씨)

시장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직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와 밀착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바이고 이는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IV-7>이 보여주듯이, 2007년 이후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탈북자

들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125명, 65.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2007년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126명, 65.6%)이 가장 많았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끈다.

표 IV-7 2007년 이후 정경유착형 빈부격차 확대 현상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다	응답자수 (명)	125	61	5	1	192
	비율 (%)	65.1	31.8	2.6	0.5	100.0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 되었다	응답자수 (명)	126	58	7	1	192
	비율 (%)	65.6	30.2	3.7	0.5	100.0

시장화가 진전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기 마련이다. 시장은 완전경쟁에서 독과점으로 점차 바뀌게 마련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장에 대한 단속은 이러한 시장 독과점화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이른바 세외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상행위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국가 및 중간관리층에 수탈당하다 보니 생계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다 단속의 본격화는 주민들의 상행위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뇌물의 증가는 상행위 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켰

I
II
III
IV
V
VI

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사회의 최하층, 특히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돈주를 비롯한 상층부 상인들은 돈 있는 사람이 더욱 돈을 버는
구조 하에서 단속까지 겹치다 보니 이들에 의한 부의 집중, 집적 현상
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들은 사실상 단속의 수혜자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경쟁자들을 제어하면서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단속은 권력층, 특히 중앙당,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검찰소 등 이른바 법기관 사람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이들
은 단순한 뇌물 수여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돈주들과 결탁하거나 자
신(엄밀히 보면 자신의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친척)이 직접
상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물론 단속 이전에도 이들이 직접 시장경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단속은 이들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경제활
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의 결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권력과 연
계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일종의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구축되고 공고화된 것이다. 이것이 시장억제 정책의 파급효과이며,
북한 지도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동시에 단속이
초래한 북한 시장화의 구조적 변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시장의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경제활동은 불법과 합법이 뒤
영켜 있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 자체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여기서 권
력기관 및 중간관리층의 자의성 및 부정부패, 비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권력층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관 운영 자금을 마련을 빌미로 개인적 비리가 파고들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북한 사회에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민들은 종전보다 많이 수탈 당하지만 이것이 국가 재정수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간 단계에서 유출되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잉여가 공적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늘어난다. 아울러 부정부패의 심화를 동반하는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국가 운영 시스템의 와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정 관료들은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갈등에 대한 영향이다. 빈익빈 구조 하에서 시장경제 영역에서 탈락, 퇴출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이는 각종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북한에서 사회갈등을 확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사회갈등의 인식과 표출

가. 인식 차원의 사회갈등

(1) 국가에 대한 불신

고난의 행군 기간의 경험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국가가 정치교육이나 공식담론을 통해 호소한 바대로 자신의 일터를 충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굶어죽거나 겨우

I

II

III

IV

V

VI

생존만 유지하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국가가 금지한 상행위(장사)에 일찍 뛰어든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함은 물론, 이들 중에는 자산을 축적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얻게 된 가장 확실한 신념이 “이제 국가를 바라면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방침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저리’라고 비아냥거리기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의 인식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가족, 개인이 소속된 기업 소가 이전 시기 개인의 생존에서 국가가 담당하던 자리를 대체하였다. “국가에 의지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노력해서 살 생각”을 하는 것이며,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달리 보면 개인과 가정이 국가와 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홀로서기’를 강요당하게 된 것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안전망으로부터 튕겨져 나와 겪어야 했던 고달픈 일상의 경험은 이들을 국가와 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심리적 이유(離乳)의 계기로 작용했고, 그 분리의 원심력은 시장화 추세와 더불어 갈수록 증대되었다.¹⁰⁴

(2) 간부에 대한 불만

일반주민들에게 간부는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간부에 대한 적대감, 울분이 많다.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을 부정부패의 화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¹⁰⁴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88~290.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고위급 간부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 많다고 한다. “앉아서 놀고 먹는 것들, 인민들 피나 빨아먹는 놈들, 뭐하나 해결하자고 해도 뇌물, 뭐하나 승낙받자고 해도 뇌물” 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전하는 바는 일반주민들은 전쟁이 나면 군관과 안전원, 간부부터 싸죽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원에 대한 원한이 크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원들에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원들은 자신들을 잡아놓고 엄포 놓고 뜯어먹는다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두고 보자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주민들이 간부와 비간부의 관계를 이조시대의 양반과 상놈의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람들은 최근 양반과 상놈,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표현을 많이 쓴다. 북한주민들은 “양반 상놈 차이가 너무 심하다, 우리 상놈들..., 우리 천민들...”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한다. “네놈들은 양반이고 우리는 상놈이다, 네놈들은 태관이 아니냐”라고 적대시한다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신분사회(status group society)이다. 북한에서 “제비는 제비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논다”는 속담이 유행한다는 것이다.¹⁰⁵

¹⁰⁵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pp. 127~130.

I
II
III
IV
V
VI

나. 사회갈등의 표출

(1) 푸념 및 신세한탄

국가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종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력 또는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최고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언설보다는 푸념이나 신세한탄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나라 확 없어져라, 무너져라”, “이 나라가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전쟁이나 확 나라”, “일제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고 한다. 어느 새터민은 전체 주민의 반 정도인 하층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고 있다.¹⁰⁶

하지만 이러한 푸념 및 신세한탄도 결코 자유롭게 늘어놓지 못한다.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크게 혼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로는 정치범으로 몰리거나 반역죄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대북소식지들은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동에 사는 김 모 할아버지(70대)는 평소 친한 노인 10여명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지난 5월 초, 그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별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지금 사는 게 어디 사람 사는 생활이냐? 강성대국 대문은 아무나 여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한 다음날, 김 할아버지는 보안서에 붙잡혀갔다. 현실에 불만이 많고, 조국과 수령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었다.”¹⁰⁷

¹⁰⁶-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290.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 청년, 공원시장에서는 식료품 매대 상인들이 당원 비밀편지에 대해 얘기하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이대로는 강성 대국이 실현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어느 때와 같이 우리 당은 빈말하는 당이 될 것이다’고 한 얘기가 보위부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누가 듣고 고발했는지 우리 셋 모두 보위부에 끌려가 꼬박 이틀 동안 조사받았다. 앞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이틀 동안 학습받았다’고 했다.”¹⁰⁸

“함경남도 허천군 허천읍에 사는 강 모씨는 말 한 마디 잘못 한 바람에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말았다. ‘세상에 이렇게 못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에 것들은 잘 먹으니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게 뭐냐. 세상이 다 뒤집어져야 우리도 살 구멍이 보일 것이다’ 등의 신세한탄을 했다. 이 말이 보안당국에 들어가 ‘말반동’으로 붙잡히게 됐다. 강씨가 끌려간 후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갔다. 늙은 아버지는 자식을 걱정하며 세상을 원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린 자녀들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올 겨울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죽고 말았다.”¹⁰⁹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수남시장에서 장사하던 여성이 화폐교환 조치로 장사가 너무 힘들어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정치범으로 몰리는 일이 있었다. ‘국가 조치 이후 값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를 않는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가 안 되니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 국가 시책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2월 3일 보위부에 불러갔는데 그 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여성과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은 ‘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망탕하여, 말반동을 색출해 첫 시범으로 만들어 나라 반역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엄포를

I
II
III
IV
V
VI

107-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82호 (2009.6.9).

108- 위의 글.

10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71호 (2009.3.24).

주려고, 시범삼아 잡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했다.”¹¹⁰

(2) 뼈라, 낙서

국가 및 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때때로 뼈라, 낙서 등의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보위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새터민 신 모 씨는 뼈라를 여러 번 보았다고 한다. 뼈라의 내용은 김정일을 타도하라는 구호, 김정일의 방탕한 생활을 알리는 내용, 우리가 배고픈 설움은 김정일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소조활동 시절 통보자료에서 뼈라 살포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다. 새터민 김 모 씨에 의하면 김일성대학 학생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판하는 편지를 김일성에게 올렸다는 것과 13차 평창 때에 김일성, 김정일 김 부자 독재를 반대하는 뼈라 살포에 관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¹¹¹

일반 주민들에게 뼈라보다 용이하고 익숙한 불만 표출방식은 낙서일 것으로 보인다. 낙서를 통해 체제, 지배계급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례는 대북소식지들을 통해 자주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월, 함경북도 연사군 보안서에 ‘사람을 못살게 구는 보안서’라는 낙서가 새겨져 보안당국이 범인 찾기에 나섰다. 사건 전날 보안원들은 시장 밖에서 장사하는 50여 명을 단속해 물건을 모두 압수했다 ... 낙서는 그 다음날 발견되었다. 누군가 보안서 복도 벽에 날카로운 못으로 ‘사람을 못살게 구는 보안서’라고 글을 써놓은 것이다. 또 보안서 출입구 철대문의 복판에 있는 붉은 오각별에도 X자가 여러 번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보안서’

¹¹⁰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2호 (2010.2.18).

¹¹¹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pp. 134~136.

라고 씌어 있었다고 한다.”¹¹²

“지난 12월 1일, 함경남도 정평군 구창리 보안서가 국기 훼손 사건으로 발각 뒤집혔다. 이 보안서 정문 벽에는 북한 국기가 새겨 있었는데, 누군가 붉은 별을 긁어 버리고, 별무늬에 ‘X’를 새겨놓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요즘 보안당국의 장마당 장사 통제가 극심해지면서 보안서에 빼앗긴 물건을 찾으러 온 상인들이 욕하는 마음에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류탄 한 알만 있으면 보안서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소리친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 그 사람을 찾았으나, 혐의가 불충분했다.”¹¹³

“지난 1월 31일 저녁 8시부터 2월 1일 새벽 6시 사이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동에서는 출판물 보급소 책방의 책소개 게시판에 쓰인 구호들 중에서 글 받침을 교묘하게 바꿔버려, 크게 ‘사건화’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숙 어머니의 고향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치 사건이라, 중앙당 선전선동부에까지 보고돼 예민한 문제가 됐다. 이번에 정치문제로 비화된 책방 게시판 구호는 원래 ‘전당적인 학습 기풍을 세우자’였는데, 누군가 ‘적당한 학습 기풍을 세우자’로 바꿔버렸다. 국가보위부에서는 시보위부와 함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시 근로단체와 청년동맹조직들을 동원해 인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내게 하고 있다.”¹¹⁴

¹¹²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88호 (2009.7.21).

¹¹³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0호 (2009.1.6).

¹¹⁴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1호 (2010.2.16).

(3) 집단적 항의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당국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도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시장(장마당)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¹¹⁵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장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청진시 각 시장관리소에서는 3월 3일, 나이 제한에 걸린 여성들을 모조리 시장에서 몰아내자며 매대를 시장 밖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기폭제였다 … 다음날인 4일, 오후 1시부터 각 시장에는 여성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시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날 수남시장에만 수천 명, 다른 시장에도 적어도 수백 명이 모여들어 전체적으로 약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도 합세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던 아주머니들도 합류했다. 한 여성이 ‘쌀을 달라’고 외치자 다른 여성들도 함께 외쳤다. ‘너네만 먹고 살려는가. 우리도 먹을 수 있게 장사하게 해달라. 아니면 배급을 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죽을 바에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는 과격한 언사로 항의하기도 했다 … 결국 시장에서는 ‘시장까지 막으면 모든 공장이 멈춰서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많은 노동자들이 굶어죽게 된다’며 이 사건을 즉각 중앙에 보고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시가 자체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여성이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¹¹⁶

¹¹⁵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발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주는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이것이 어디 우리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쁜 놈들만 살판 치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나”는 등의 불만을 털어놓는다.

¹¹⁶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5호 (2008.3.1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7호 (2008.3.26).

아울러 지난해 11월 말의 화폐개혁으로 식량 값이 폭등하고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북한 정부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1월 함경남도 단천에서는 전쟁 노병을 위시한 일부 주민들이 시당 앞에서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주로 70~80 이상 고령의 전쟁 노병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이들의 뒤를 따라 일반 노인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어 기세가 대단했다. 전쟁 노병들이 먼저 시당 사무실 앞에 줄을 치고 앉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굶어죽지 않고 악쓰며 살아왔는데,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지금 화폐 교환한 뒤부터는 다 굶어죽게 생겼다. 우리를 이대로 굶어죽일 셈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쟁 노병들의 연설을 들은 주민들은 약에 반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한때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다. 한 노인은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할 바엔 시당이나 인민정권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 이런 정부라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고 절규하듯 말했다. 단천시 시당에서는 중앙당에 긴급히 직보를 올렸고, 이에 중앙당에서는 단천시 농장에서 2호미로 저장해둔 식량 일부를 배급용으로 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¹¹⁷

한편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는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북한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현재의 종합시장을 폐지하고 종전의 농민시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당국이 그 방침을 철회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북한당국은 내각 상업성 지시문과 도 지시문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전국의 시장을 농민시장으로 개편한다고 통보

¹¹⁷-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9호 (2010.2.2).

I
II
III
IV
V
VI

한 바 있다. 현재의 종합시장을 없애고 농민시장으로 환원시켜 앞으로 식량을 제외한 농산물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식량은 양정사업소에서, 공산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시행 시기가 결국 연기되었다. 배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시장을 없애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¹⁸

아울러 북한당국은 각 성, 기관들과 도·시·군당에 대해 올해 1월 14일부터 종합시장을 종전의 농민시장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즉, 매일 열리고 농토산물뿐 아니라 식량, 공산품도 판매를 허용했던 종합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10일에 한 번씩만 열리면서 식량을 제외한 농토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 과거의 농민시장 제도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월에 실시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되었던 것을 1년 만에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도 화폐개혁 직후의 험악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결국 유야무야되었다.

(4) 각종 범죄

국가에 대한 불신, 지배계급에 대한 불만의 표출의 한 유형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절도, 강도, 살인, 밀수, 도박, 마약 등 국가가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이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 가운데 체제 위협의 우려가 있는 여러 행위들을 이른바

¹¹⁸ 평양의 한 간부는 “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방 관리들의 의견이 빗발쳤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현 시점에서 종합시장을 폐지하면 내란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간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1호 (2009.1.13).

‘비사회주의 행위’라 하여 집중 감시하고 있다.

당기관, 보위기관, 안전부 등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단속하는 ‘비사그루빠’를 조직해서 분기별로 대대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2월부터 국경지역에 대한 정치학습을 통해 인신매매, 자식의 한국 도주, 중국·한국·일본으로부터 현금 수수, 손전화기 통한 중국과의 연락, 마약 장사 및 밀수, 무단 숙박 등 7가지 행위를 비사회주의 검열 대상으로 지정, 전달했다. 어느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핸드폰 사용, 유언비어 유포, 월경, 가정지물을 팔거나 재산정리, 수상한 사람 출입, 밀수(파동반입물, 유색금속), 빙두 등의 마약, 남한 비디오 시청 등 15가지 조항이 감시 및 보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¹¹⁹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절도, 강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 특히 올해는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이러한 강도, 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안남도 온천군에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열악해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강도들이 활개를 치는 등 치안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온천군 관내에 2월 달 들어서 하루 평균 5~6건 이상의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온천읍 19반 1지역관내에서 한밤중에 두 세대가 연달아 강도를 당해 각각 현금 10여만 원과 20여 만원, DVD 녹화기와 자전거 등을 빼앗겼다. 평소에도 두 집은 대단히 잘 사는 집으로 유명했다.”¹²⁰

“함경북도 청진시 보안당국은 한 끼니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각박해지면서 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자 골

¹¹⁹-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81~282.

¹²⁰-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6호 (2010.3.16).

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저녁 9시경, 송평구역에서 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포항구역 남향동에 사는 김 모씨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상태로 죽어있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자전거를 훔쳐간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요즘엔 한 사건이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다른 살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것들도 많다.”¹²¹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당국은 각 동마다 인민반장들을 통해 ‘저녁 7시부터 불필요하게 다니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올해 들어 부쩍 강도,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²

한편 이러한 살인사건 가운데는 안전원, 보안원 등 이른바 법기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살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지난 12월 26일, 보안원 일가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원의 아내는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었고, 12살 난 딸아이가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보안당국은 가택수사 결과 집안 재물을 손댄 흔적이 없는 것에 주목하고, 보복성 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척시키기로 했다.”¹²³

(5) 정치적 동의 창출 기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

국가에 대한 불신, 지배계급에 대한 불만의 표출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부 정치적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교육과 조직생활 등 정치적 동의 창출 기제에 대

¹²¹-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7호 (2010.3.23).

¹²²- 위의 글.

¹²³-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3호 (2009.1.27).

한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 저하, 즉 소극적 저항이다.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 근로단체의 조직생활과 정치교육이 완전히 이완되었다. 생활총화와 정치교육의 출석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회의와 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간간부에게는 여전히 생활총화가 엄격하게 진행되지만 일반주민들, 말단의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생활총화가 매우 느슨하게 되었다. 생활총화의 기본 방식이 내가 스스로 자아비판을 먼저 하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비판을 하는, 즉 상호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상호비판을 하기 싫어한다. 예컨대 내가 최근 들어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고 또 빨리 퇴근하는 등 공장 생활에 종전만큼 충실하지 못하며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자아비판 한다고 하자. 그러면 과거에는 다른 당원들도 나에게 비판을 가하는 등 상호비판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호비판이 많이 줄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 호되게 욕을 먹는다. 먹고살기 힘들어 밖에서 장사하느라 공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것인데, 너가 나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비판하느냐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그러다보니 생활총화 시간에 남을 비판하는 게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눈에 뜨게 문책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생활총화를 주재하는 당세포비서에게 적당히 뇌물로 무마시킨다.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당세포비서는 ‘앞으로 잘하라’는 선에서 끝낸다. 결국 생활총화라는 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탈북자 K7씨)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정치교육체계가 재정비되고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화의 진전과 자본주의 사상의 유입에 따른 체제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생활이나 정치교육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구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조

I
II
III
IV
V
VI

직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이고 돈을 주고” 생활총화 참석을 면제받는 사람,¹²⁴ “참여하기 싫어서 기어서 간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여도의 분포도 다양하다.

함경북도 농촌지역에서 2005년 말까지 농근맹 해설강사로 일했던 어느 새터민은 당시 정치학습이나 생활총화의 평균적인 참석율이 50% 이하였다고 증언한다. 생활총화 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 청년동맹 비서 등이 청년동맹원들에게 각자 생활총화 내용, 즉 자신의 조직 생활상의 결함, 원인, 대책 등을 종이에 대충 적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생활총화 회의를 한 것처럼 문건을 만들어 검열을 대비한 기록만 남기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님 한마디 하고는 그냥 사는 얘기, 수다를 떨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한 달에 몇 천원에서 1만원 정도를 내면 여맹 등의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볼 때 시기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전의 시기와 같이 내실있는 정치교육과 주민들의 성실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²⁵ 이는 엘리트층, 중간간부층보다는 기층 주민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¹²⁴ 이것이 공장, 기업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8·3 노동자이다.

¹²⁵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83~284.

V. 북한 사회갈등 전망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북한의 유일독재체제와 시민사회의 미발달 등 체제저항이 어려운 상황적 조건 등에 따라 북한변화의 내부적 동인이 미약하다는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는 북한에서 의미있는 변화들이 진행될 경우 그 요인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¹²⁶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경제위기는 북한사회에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와 사회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3대세습 시도라는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장기지속형 경제위기와 비공식적 시장화 경향은 공식적인 북한의 사회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북한의 사회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기 서방세계에서 진행되었던 소련 및 동유럽사회주의권에 대한 반대하고도 심층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주의사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점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는 어느 한 순간 또는 특정 계기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체제위기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체제신뢰감 상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된 사회체제가 완전히 성향을 달리하는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대부분이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사회주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세계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적

¹²⁶ 이효선, “렉스의 사회변동 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갈등과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한국사회학회, 2002), p. 27.

I
II
III
IV
V
VI

으로는 체제에 대해 냉소 내지는 신뢰의 철회라는 자기방어적 기제를 장기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있어서 정치영역과 권력변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2009년 단행된 북한화폐개혁의 사회적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못한 정치,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영역을 넓혀왔던 북한의 시장은 북한주민들의 생존경제차원의 적응방식이었다. 북한공식경제가 주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의 지속은 공식경제의 신뢰도 추락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자구책 마련을 강요했으며, 시장이 그 출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좌절과 아울러 체제와 당국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화폐개혁 조치로 북한당국과 공식경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고,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잠재해 있던 체제에 대한 은유적 저항이 점차 현재화 되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과 연계된 당 간부들 및 소위 큰 손들 그리고 비호세력들은 화폐개혁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기층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만은 북한사회의 갈등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¹²⁷

이 같은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변동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⁸ 사회성원들의 심리적 상태가 혁명과

¹²⁷-조한범, “북한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¹²⁸-Robert H. Lauer,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사회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이비스(James C. Davies)의 이론¹²⁹에서 북한화폐개혁 시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다. 데이비스의 이론은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변동의 주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변동은 절대적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보다는 기대가 상승하는 국면이 좌절될 경우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공식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이 선택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의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의 저항 및 불만은 과거와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개혁은 일회성 정책실패라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사회에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당국의 신속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공급의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화폐개혁의 의도하지 않았던 후유증은 북한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당국에 대한 신뢰감의 저하는 북한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자 사회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 수평적 균열구조와 분파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엘리트간 정책갈등의 가능성이 증

Bacon, 1977), pp. 241~246.

¹²⁹ James C. Davi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ASR)*, Vol. 27, No. 1 (February 1962), pp. 5~19.

대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과 대외개방 등에 있어서 엘리트 내에 분파의 형성과 갈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¹³⁰ 엘리트집단 내부의 분화는 북한경제위기의 지속 및 심화양상,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및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의 분화과정은 과거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경제위기의 지속과 시장구조의 형성과정은 새로운 사회갈등구조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경제위기 속 일련의 변화과정은 북한의 동질화되어 있던 사회주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신흥 유산계급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영 상인계층의 등장은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아울러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갈등을 기초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위기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불평등 구조는 기존 사회주의 계급·계층구조의 전면적 와해와 더불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경제위기는 전사회적인 궁핍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계급·계층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불평등을 둘러싼 갈등구조의 심화와 아울러 급격한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체제전환이나 급격한 시장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도 사회

¹³⁰-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균열과 갈등구조,” pp. 229~248.

갈등구조의 해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본격적인 체제전환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대추구행위와 부패, 불법적 경제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새로운 체제에 맞게 재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불법 또는 비호세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지하경제의 확산과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새로운 유산계급들이 형성될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체제의 해체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탈중앙화는 국가의 통제능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사회주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들에게 경제권력이 양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경제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체제의 혼란상태와 지하경제의 확산은 통제력을 가진 관료엘리트들의 비제도적 간섭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 과정이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기후퇴 과정을 수반하게 될 경우 전반적 반감과 아울러 반발과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구체제의 기득권층들과 엘리트층들은 저항보다는 지대추구행위와 불법적 행위를 통한 ‘내부자사유화’ 과정을 급속히 진행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일방적인 사회적 하향화를 강요당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의 지하화와 아울러 비합법적인 경제세력과 구엘리트층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하경제화 현상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구조가

I
II
III
IV
V
VI

와해되는 기간에 따라서 양태를 달리할 것이다. 북한의 공식배급체제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경제화는 암시장의 발달과 이에 대한 관료부패의 결탁, 그리고 전체적인 생존경제적 특성의 부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시장체제의 형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흐름이 변화하고, 따라서 사회구조의 재편이 발생한다.

경제위기의 심화와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주민 모두가 과거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새로운 불평등구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모두의 새로운 계급·계층적 분화를 의미한다. 시장친화력 및 시장과 관계된 유리한 정치·경제·사회적 자본을 지닌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계급·계층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은 경제위기의 심화와 광범위한 관료부패, 비공식적 시장화의 확산 및 지하경제화 경향과 더불어 ‘축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하향적 계층이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새로운 신흥유산층의 형성은 북한 사회갈등의 근본적 지형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형성과 아울러 소외층들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시장화에 편입되지 못한 집단의 반발은 공산주의체제의 복구와 국가주도 경제체제 및 사회주의 복지체제에 대한 회귀라는 이념적 지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화 과정이 가속화하게 될 경우 동시에 과거회귀형 좌파지향성도 일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 사회적 궁핍화 현상이 악화된다면 사회주의형 평등주의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경향성은 보다 심화될 것

이며, 이는 시장화 경향과 배치되는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잠재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민사회와 장기지속형 독재체제, 통제와 감시체제 등은 체계적인 저항세력의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탈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변화의 동인이 집권세력간의 정치적 급변사태나 체계적인 저항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요인은 오히려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아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변화는 대다수 일반주민들이 안정적 일상세계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뢰를 철회했다는 점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이 비교적 평화로운 비 유혈적 과정을 통해 진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경제위기의 심화로 일상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북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장기간 자신들의 생존은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에 대해 신뢰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¹³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불평등구조의 심화, 즉 계급·계층의 하향이동 경향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유산층의 형성과정은 심각한 사회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북한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¹³¹ 정치적 순응과 물질적 이익의 담보라는 국가와 주민 간 사회주의형 계약관계는 장기지속형 경제위기속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주민들은 이를 대체할 불법적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는 북한에서 주민의 탈국가화 및 사회주의가치와 반하는 일탈적 물질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존의 제도와 가치체계가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성로, 『북한의 사회불평등구조』 (서울: 해남, 2008), pp. 289~290.

I
II
III
IV
V
VI

VI. 결론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강력한 통제와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사회갈등이 현 단계에서 대규모의 사회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및 기타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는 아직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시민사회는 맹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저항세력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갈등과 사회변동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 대부분의 사회갈등은 체제저항이 아닌 생활세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은유적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불만은 비정치적인 형태로 식량 및 상거래 등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된 특징을 보인다. 체제저항이나 정치적 불만으로 낙인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의 표출은 소극적이거나 변형된 형태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직접적인 불만의 표출은 푸념이나 신세한탄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보다 강력한 불만의 표출은 주로 낙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전단살포와 같은 과감한 방식도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당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은 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단속에 대한 항의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화폐개혁과 같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과 손실을 강요하는 경우 항의의 격렬성이 보다 심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개인적 항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적 항의 및 불만의 표출, 그리고 저항행동의 조직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비판 및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보기

I
II
III
IV
V
VI

어렵다. 당 및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만의 표출은 주로 중간 간부, 특히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안전원과 보안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만표출의 빈도가 이전에 비해 빈번하다는 점과 보다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에 대한 단속과 화폐개혁 등 직접적인 생계에 위협이 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과거와 달리 집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절도, 강도, 살인사건 등 일탈적 범죄 행위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사회갈등과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은 대부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와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북한사회갈등의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수탈 구조와 부익부 빈익빈 구조, 특히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현 상황에서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갈등구조는 북한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보다 확대,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사회의 일탈과 일상의 저항이 향후에도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갈등의 심화는 표출대상의 확대와 표출방식의 과격화를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붕괴는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수반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생이 불가능한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누적된 대중적 불만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 말기에 내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점들은 외견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잠재적·은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사회갈등은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언제든 현재화 될 수 있으며, 특정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급격한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처한 사회주의적 발전단계와 특수한 상황적 조건은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의 방향성과 사회갈등의 지형을 좌우할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전환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한의 존재는 북한의 변화가 일반적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지닌 사회주의적 특성과 북한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은 북한변화의 방향성과 아울러 사회갈등의 양상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07 한국사회의 갈등의식조사』. 서울: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07.
- 데이비스·스케이스.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85.
- 러셀 J. 달턴·만프레드 퀴흘러·빌헬름 뷔르클린. 박형신·한상필 역.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서울: 한울, 1996.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7.
- _____.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동녘, 1996.
-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 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1998.
- 올리히 벡. 문순홍 역. 『정치의 재발견: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 서울: 거름, 1998.
- 올리히 벡. 정일준 역.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자유의 아이들과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민주주의』. 서울: 새물결, 2000.
- 이성로.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 서울: 해남, 2008.
-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 2008.
- 임강택. 『북한 경제의 시장화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2000.

조나단 H. 터너.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2.

_____. 정태환 외 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나남, 2001.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조지 리처. 최재현 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_____.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05.

한국여성개발원.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Castells, Manuel.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MA: Edward Elgar Pub, 2004.

Collins, Randall. *Conflict Sociology: Toward an Explanatory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Coser, Lewis A.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London: Free Press, 1956.

Coser, Lewis A. and Bernard Rosenberg. *Sociological Theory: a book of readings*. New York: Macmillan, 1976.

Dahrendorf, Ral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Goffman, Erving.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Goldstone, Jack A. *Revolution and Rebell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Lane, David.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 Lauer, Robert H.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1977.
- Meyer, David S. and Sidney G Tarrow.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 Moore,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 Paige, Jeffery M. *Agrarian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Export Agriculture in the Underdeveloped World*. New York: Free Press, 1975.
- Sakwa, Richard. *Soviet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9.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taniszki, Jadwiga.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Szalai, Erzsebet. *Gazdsa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 Addison-Wesley, 1978.
- Vanfossen, Beth Ensminger. *The Structure of Social Inequalit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 Vattimo, Gianni. *The Transparent Socie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Walder, Andrew George.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 Wallace, Ruth A. and Alison Wolf.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0.
- Weber, Max.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ch.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 Winiacki, Jan.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A Property Rights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 Восленский , М.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 брь, 1991.
- Джилас, М. *Лицо тоталитаризма* Москва: Новости, 1992.
- Черников, Г.П..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то он ?* Москва: Междун ародн ые отношения, 1992.

2. 논문

-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7.
- 법륜스님. “북한 식량 상황과 인도적 위기.”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좋은벗들 주최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집, 2006.
- 빌헬름 하이트마이어. 김희봉·이홍균 역. “해체사회.” 아르민 폰스 편.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서울: 한울, 2003.
- 양문수. “시장 억제기 북한의 시장화: 실패와 함의(2007-2009).” 서울대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엄 발표논문, 2010.
- 이효선. “렉스의 사회변동 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갈등과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한국사회학회), 2002.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2호(한국사회학회), 2005.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균열과 갈등구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전홍택. “북한 제 2경제의 성격과 기능.” 『월간 통일경제』. 2월호, 현대경제연구원, 1997.
- 조대엽.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 _____. “4월 혁명의 순환구조와 6.3 항쟁: 역사주기론의 시각.”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서울: 한울, 2008.

페르낭 브로델. 김영범 역. “역사학과 사회학.” 신용하 편. 『사회사와 사회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Csaba, Laszl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Dahrendorf, Ralf.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 No. 2, June 1958.

Davie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ASR)*. Vol. 27, No. 1, February 1962.

Glinkina, S.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Grossman, Gregory. “The ‘Second Economy’ of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1977.

Kemeny, Istvan. “The Unregistered Economy in Hungary.” *Soviet Studies*. Vol. 34, No. 3, July 1982.

Nee, Victor.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ASR)*. Vol. 54, No. 5, October 1989.

_____.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ASR)*. Vol. 56, No. 3, June 1991.

Rona-Tas, Ako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AJS). Vol. 100, No. 1, 1994.
Zaslavsky, Victor.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Весельков, Ф. С.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Корягина, Т.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3, Москва: 1990.

Шкратан, и тд, О. И.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3. 기타자료

『연합뉴스』.

『한겨레』.

조한범. “북한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Online Series
Co 10-03, 2010.2.4.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5호, 2008.3.12.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117호, 2008.3.26.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60호, 2009.1.6.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61호, 2009.1.13.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63호, 2009.1.27.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71호, 2009.3.24.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82호, 2009.6.9.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88호, 2009.7.21.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29호, 2010.2.2.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31호, 2010.2.16.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32호, 2010.2.18.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36호, 2010.3.16.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37호, 2010.3.23.

Sztompka, Piotr.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2000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합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송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한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봉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6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연,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소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www.kinu.or.kr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www.kinu.or.kr